



# Fair Player Club Compliance Package

– ASEAN편 (베트남·인도네시아) –



## 페어플레이어클럽 (Fair Player Club, FPC)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부패 발생 기회와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반부패 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어클럽은 국내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및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구, 평가를 진행하며 기업·정부·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공동노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NK)
- 주관: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GCEF)
- 후원: 세계은행,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Siemens Integrity Initiative)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외교부
- Compliance Package 조사·연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NK)
- Compliance Package 발간연도: 2018년 1월



# Contents

---

## I. 서론 (Introduction)

1. ASEAN 개요

## II. ASEAN 지역의 반부패 동향 (Anti-corruption in ASEAN)

1. ASEAN 반부패 동향
2. ADB/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

## III. ASEAN 국별 반부패 동향 및 제도 (Anti-corruption Policies and Trends of ASEAN Countries)

1. 싱가포르
2. 말레이시아
3. 인도네시아
4. 베트남
5. 필리핀
6. 태국
7. 라오스
8. 미얀마
9. 캄보디아
10. 브루나이

### ▶ Special Page: ASEAN 주요국의 부패방지기구 비교

## IV. 베트남·인도네시아 반부패법 및 사례 (Legal System and Cases of Vietnam and Indonesia)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 ※ 참고자료 및 웹사이트 (Reference)



#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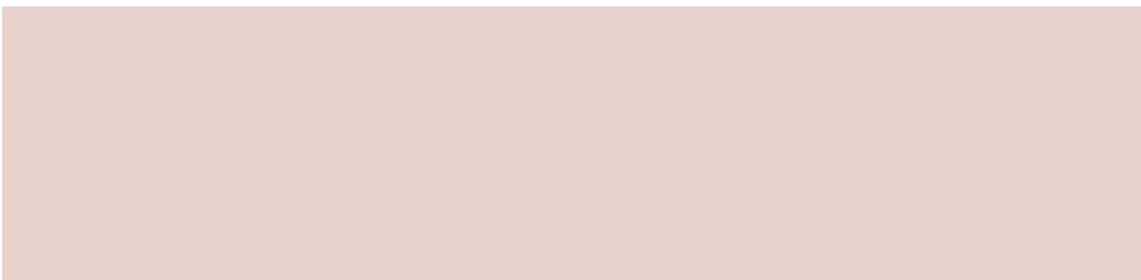
## I. 서론 (Introduction)

2015년 말 출범된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는 인구 6억 3천만 명, GDP 2조 6천억 달러의 거대한 공동체로 연 5% 성장의 역동적이고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아세안의 무역은 전세계 6.9%, 인구 수는 전세계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다. 정치와 경제를 통틀어 세계에게 가장 다채로운 지역으로서 그 비중과 잠재력을 고려할 때, 아세안 시장은 기업에게 있어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다. 그러나 국경 간 무역과 투자는 새로운 부패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사업 거래의 증가가 더 많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이 신흥 시장에서 펼치는 활동이 글로벌 규제 기관의 단속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반부패 관련 국제규범이 구체화되고 국제적 공조도 보다 가속화되는 추세 속에서 빠른 경제성장과 충분치 않은 반부패 단속이 결합되어 있는 아세안 시장은 규제 기관들이 주목하는 핵심 지역이 되었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부패 척결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시 지역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모두 유엔 반부패협약(UNCAC)의 비준국으로 협약에서 제시하는 광범위한 조치들을 이행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한편, 아세안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는 현장의 뇌물과 부패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과 감독의 상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내부 규제 준수의 확립과 유지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공공 부문의 부패는 여전히 많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주요 문제로 남아 있고, 이미 몇몇 기업들은 운영, 평판, 재정적 손해를 불러오는 법적 분쟁으로 큰 대가를 경험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은 견고한 뇌물방지 및 반부패 규제 준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항상 경계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영국 부패방지법(UK Bribery Act 2010)의 적용범위를 감안할 때, 아세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패 사건도 미국과 영국은 물론 자국의 규제 단속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유엔 반부패협약(UNCAC), OECD뇌물방지협약 등의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에 참여하는 국가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있을 경우 한국 검찰은 물론 규제 당국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지침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연구·조사한 페어플레이어클럽 컴플라이언스 패키지(Compliance Package) <아시아·중국편>의 후속으로 아세안 회원국의 부패방지 법과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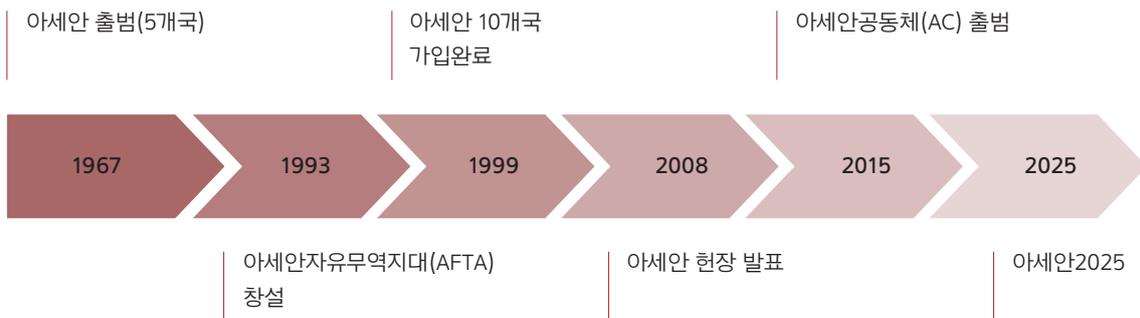
# 1. ASEAN 개요



## ● 아세안(ASEAN)의 설립 및 조직

아세안(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베트남전 본격화, 인도차이나 공산주의 확산 등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1967년 8월 8일 5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이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 창립 선언(방콕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결성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다.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라는 목표 하에 1992년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 1994년 아세안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를 출범하여 정치 및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1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ASEAN 회원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ASEAN+3]**  
 ASEAN 회원국(10개국), 대한민국, 중국,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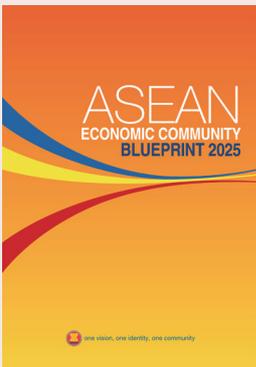
●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AC)



아세안 공동체는 2015년 12월 31일 '하나의 비전, 정체성, 공동체'를 목표로 공동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향후 10년간 통합의 다음 단계인 '정치적으로 단결(cohesive)하며, 경제적으로 통합(integrated)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responsible)있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미래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아세안 협력의 청사진을 담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ASEAN Community Vision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역내 통합을 심화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세계평화, 안보, 안정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아세안 공동체는 크게 (1) 정치 안보 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APSC), (2) 경제 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3) 사회 문화 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 세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sup>1</sup>

아세안 경제공동체 2025 청사진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2015년 11월 21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7회 아세안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출범하고, 향후 10년간 아세안 공동체의 새로운 로드맵 역할을 할 "아세안 경제공동체 2025 청사진(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을 발표하였다.

5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침인 핵심요소로 구성된 "AEC 청사진 2025"는 민간부문, 지역사회 기반 조직, 기타 아세안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굿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호응력 있는 규제제도 제고를 구상하고 있다.

5대 목표 중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은 지역 경쟁력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요소를 내용을 담고 있으며, 효과적인 경쟁정책, 규제개선 및 규제 모범사례 확립,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굿 거버넌스'를 강조하였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6년 2월)

<sup>1</sup> 한-아세안센터 홈페이지 (www.aseankorea.org)

# ASEAN 지역의 반부패 동향



# 1. ASEAN 반부패 동향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많은 혜택을 약속하지만, 더 큰 차원의 경제통합은 부패에 관한 새롭고 더 거대한 도전과제들을 지역에 부여할 것입니다. 이를 내버려둔다면, 부패는 아세안 국가들의 공동목표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과 국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Natalia Soebagjo,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 사무총장 겸 본부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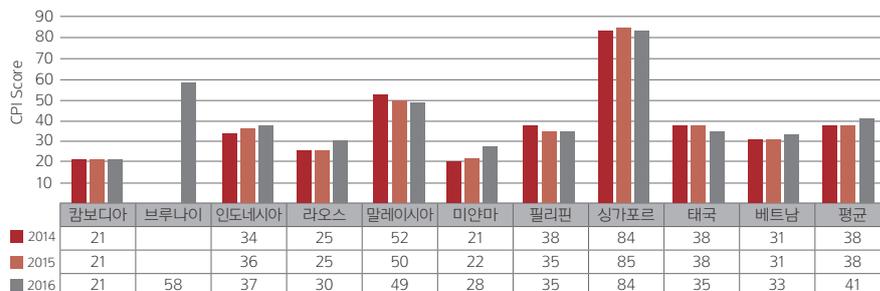
## 반부패 단속의 인식과 현실

아세안 전역에 퍼지고 있는 반부패 운동을 살펴보면, 지역 전역에서 반부패 단속 개선을 향한 피할 수 없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현실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를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순위(7위)를 기록한 싱가포르를 세계적으로 역동적이고 존경 받는 금융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러한 명성에 흠집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싱가포르의 반부패 규제 약화가 요인이기보다는 이웃 국가에서 검은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의 CPI순위는 평균 이하로 176개국 가운데 캄보디아가 156위를 기록했고 이어 필리핀 101위, 인도네시아 90위, 말레이시아 55위를 차지했다. 말레이시아는 탄탄한 법적, 정치적 안정성을 보유한 국가로 자국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1MDB 스캔들은 정계 최고위 수준에서 심각한 부패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과 같은 지역에서는 반부패 노력이 공공 아젠다의 최상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나, 전반적으로 매년 이들의 CPI 순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치, 사법, 제도, 경제 등 많은 수준에서 부패를 근절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일부 산발적인 법적 개혁과 단속이 성공을 거두기는 했으나, 아세안 지역은 여전히 부패 기사가 신문 일면을 빈번히 장식하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이다. 그러한 기사들은 단기적으로 부패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부패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반부패 단속 개혁과 개선이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

ASEAN국가 부패인식지수 (CPI)



국제투명성기구(TI)

## 지역 내 규제 격차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017년 발간한 "유엔반부패협약(UNCAC) 이행점검 보고서 제2판 - 범죄화 및 집행, 국제협력(State of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Criminalization, Law Enforc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을 통해 아세안 지역 반부패 시스템이 지닌 결함들이 개별 회원국들의 반부패 노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 예로 다수의 아세안 국가에서는 국내법 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를 범죄를 규정하지 않고, 법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한 법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은 다국적기업과 해외 투자자들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 밖에도 유명무실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로 부패 사례에 대한 정보와 증거 수집이 어려운 점, 지역 내 모순되는 법안과 역량 차이로 인한 낮은 사법공조 및 국제협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요구된다.

〈Anti-corruption enforcement in the ASEAN region〉, The Asia Pacific Investigations Review 2017, Hogan Lovells (2017),  
Corruption Is Holding ASEAN Back, The Diplomat (2017-01-31)



## 2. ADB/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

(ADB/OECD Anti-Corruption Initiative for Asia-Pacific)



### ● 개요

ADB/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는 유엔반부패협약(UNCAC)의 효과적 이행을 통한 아태지역의 부패 추방 노력을 지원하고,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 for Asia-Pacific)' 이행을 위한 국가별 정책 수립과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9년 창설한 협의체다. 본 이니셔티브는 아태지역 정부들이 부패가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 국제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다자간 반부패기구로서 기능하도록 설립되었으며 ADB와 OECD는 공동사무국으로 회원국의 반부패 개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기술 자문을 지원한다. 2017년 12월 기준 아태지역 국가(31개국) 반부패 관련 정부기관 및 ADB, OECD, UNDP, World Bank 등 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 회원국 및 자문기구

#### [회원국(Steering group members) - 31개국]

아프가니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중국, 쿡아일랜드, 티모르-레스테, 피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키르기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태국, 바누아투, 베트남

#### [자문기구(Advisory group)]

미국변호사협회(ABA),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 호주국제개발기구(AusAID), 스웨덴국제개발협력기구(SIDA), 국제투명성기구(TI),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세계은행(World Bank), 독일국제협력공사(GIZ),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GOVNET)

##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 (Anti-Corruption Action Plan for Asia-Pacific)

2001년 제3차 지역회의(도쿄)에서 채택된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은 반부패 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된 아태지역 최초의 반부패 규범으로서 부패척결을 위한 3개 부문(정부, 기업, 시민)별 행동계획으로 구성되었다.

###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 3개 부문(Three Pillars)의 주요내용<sup>2</sup>

#### 1) 효과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체계의 구축

- 행정서비스의 청렴도, 책임성 및 투명성 증대

#### 2) 뇌물방지를 위한 행동 강화 및 기업 활동의 청렴성 제고

- 효과적인 예방·조사·기소, 기업의 책임성 제고

#### 3)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지원

- 교육·홍보 강화, 정보공개 확대, 시민참여 촉진

## ● 주요 활동

주요 활동으로는 크게 아태지역의 부패 척결 노력 지원을 위한 '정책대화', '정책분석', '역량개발' 활동이 있다. ADB/OECD는 아태지역 정부 간 정책대화 촉진을 위해 회원국 정부 대표와 자문기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그룹회의(Steering Group Meeting)와 아태지역 정부의 반부패 역량개발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아태지역 반부패회의(Regional Conference)를 3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다.<sup>3</sup> ADB/OECD 사무국은 '아태지역 반부패 정책동향 분석 보고서'와 함께 사법공조·범죄인인도·부패자산회복(2008), 뇌물죄(2010), 기업윤리(2014) 등 부패 관련 '주제별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한다.

우리 정부는 2000년 '제2차 서울 컨퍼런스' 개최를 비롯하여 ADB/OECD 주관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에서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시행효과를 소개하였다.

### ADB/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 활동

#### 1) 정책대화(Policy dia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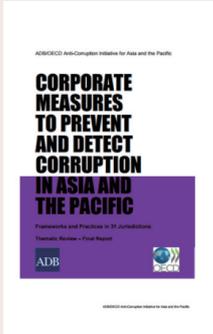
- 조정그룹회의(Steering group meeting): 실무급 라운드테이블(연 1회)
- 아태지역회의(Regional conference): 전체회의 및 주제별 워크숍(3년 주기)
- 법집행 네트워크 회의(Meeting of the Law Enforcement Network): 실무급 라운드테이블(연 1회)
- 국가별 평가(Country review): 희망 국가를 대상으로 반부패 시스템 및 반부패 정책의 이행현황 평가

#### 2) 정책분석(Policy analysis)

- 아태지역 반부패 정책동향 분석 보고서 발간
- 부패 관련 정책연구(Thematic Review) 보고서 발간  
"조달 분야 부패추방"(2006), "사법공조·범죄인인도·부패자산회복"(2008), "뇌물죄"(2010), "기업윤리"(2014), "국제사법공조"(2017)

#### 3) 역량개발(Capacity building)

- 역량개발 세미나 개최(연 1회)



**아태지역 반부패 정책동향 분석 보고서 – “기업윤리” (2014)**  
**(Corporate Measures to Prevent and Detect Corruption in Asia and the Pacific)**

본 보고서는 ADB/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 회원국의 부패방지 정책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31개 회원국의 부패척결 노력과 시사점, 도전과제를 담고 있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민간부문의 부패방지에 관한 인식 증대와 규제 도입을 위한 민간협력 사례를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내부통제, 감사 위원회,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정책, 제4장에서는 재무 기록의 보관 및 보고, 외부 감사, 규정 위반 시 자진신고 의무 등 회원국의 재무 투명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회계감사를 위한 국제표준,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국가별 적용 현황을 담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지역적 시사점을 밝히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

**민간부문의 부패 방지 노력**

- 회원국의 절반이 공공-민간협력이 연계된 반부패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음
- 참여국의 40%가 기업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자진신고’ 또는 관련 ‘예방 조치’를 시행한 경우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함.
- 아태지역 내에서 기업 대상 곳 거버넌스 상 수여 등과 같은 인센티브 활용이 초기 단계임.
- 회원국 내에서 청렴서약제(Integrity Pact)\*의 활용이 미비함

\* 청렴서약제: 청렴계약제는 정부의 조달구매, 용역계약, 등의 공급공사 이발에 참가하는 업체와 행정기관 양당사자 모두가 입찰신청, 낙찰, 계약이행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위반시 제재를 받겠다는 것을 서로 서약하는 제도로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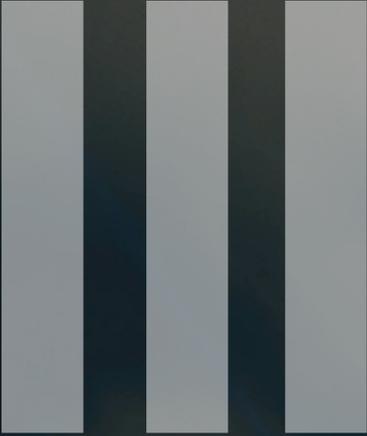
**내부 통제**

- 모든 회원국이 법률 혹은 기타 수단(내부감사, 감사위원회 등) 아래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있었음.
- 감사위원회 혹은 감사회 설치와 별도로 세가지 내부통제 요소(내부감사,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시스템)가 국내 제정법에 의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다수의 회원국이 특정 범주에 속하는 기업(대기업, 상장기업, 금융사)에 대한 내부 감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 절반이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재무기록의 투명성**

- 국제회계기준의 확산으로 회원국들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표준 자체가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회계 및 재무 기록 보관과 관련하여 UN와 OECD가 채택한 표준은 소수의 회원국들에게 도달하기 힘든 높은 기준임.
- 대부분의 회원국이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을 채택하고 있으나 모든 기업이 IFRS 표준을 채택, 적용하기 어려움.
- 외부 감사 분야에 대해, 회원국의 대다수가 국제 표준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다수의 회원국에서 독립적인 회계 감사 전문직과 회계감사자체단체를 설립되어 있음. 그러나 회계 감사직이 없는 국가의 경우 효과적으로 회계 감사를 관리 할 수 있는 환경조건이 부족하며, 이는 국가의 역량 구축과도 연계되어 있음.
- 집행에 관해 모든 회원국이 재무보고, 감사 및 관련 기업 지배구조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회원국의 약 3분의 1이 법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패널티(벌금 및 구금)를 보유하고 있음
-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처벌방법은 ‘벌금’으로 응답됨. 회원국의 절반이 가장 큰 처벌로 벌금을 활용하고 있으나 낮은 벌금으로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

\*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하는 회계 기준. 전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재무보고 및 회계 실무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규정하고 있음.



# ASEAN 국별 반부패 동향 및 제도



# 1. 싱가포르



인구 : 5,607,283명  
 면적 : 719.1km<sup>2</sup>  
 수도 : 싱가포르  
 GDP : 3,057억\$ (세계40위)  
 언어 : 말레이어, 영어, 타밀어, 중국어  
 화폐 : 싱가포르 달러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청렴국가로 꼽힌다. 싱가포르의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자리잡고 있으며, 부패 적발 시 적극적인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84점을 받아 덴마크, 노르웨이(이상 90점) 등에 이어 7위를 차지하였다. 싱가포르의 정교한 법률 체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뇌물을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부패단속기관인 부패행위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CPIB)은 총리실 직속 기관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사 권한으로 효과적인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반부패법으로는 뇌물수수, 선물 및 급행료 지급을 금지하는 형법과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이 있다. 부패방지법은 처벌은 최대 벌금100,000싱가폴달러(미화 8만 달러) 또는 7년의 징역, 그리고 사안에 따라 벌금과 징역이 모두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며, 원칙으로 자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부패 범죄 또한 국내법에 따라 처벌한다. 싱가포르는 유엔 반부패협약(UNCAC) 비준국이다.

싱가포르는 자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 헤리티지 센터(CRHC)를 2017년 1월 개관하고, 뇌물방지 관리 체계에 대한 '싱가포르 스탠다드(Singapore Standard, SS) ISO 37001'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SS ISO 37001은 싱가포르 기업들이 자사의 뇌물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게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한 민간부문 청렴도 제고를 위해 기업들에게 기업 반부패 가이드 'PACT: A Practical Anti-Corruption Guide for Businesses in Singapore'를 제공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준법경영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6월 부패행위조사국(CPIB)은 2016년에 접수된 부정부패 민원과 영장 수사가 진행된 사례 모두 감소했다고 밝혀, 청렴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네슬레

2016년 4월, 네슬레(Nestlé) 전 직원이 싱가포르의 음료용기 제조업체 SCAD Partners Pte.로부터 계약 체결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9차례 총 62,071달러를 받은 혐의로 체포되었다. SCAD Partners Pte.의 임원은 2012년 네슬레와의 계약 체결에 대해 9,000달러를 제공하고, 네슬레 담당자에게 회사 수익의 50%를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SCAD Partners Pte.는 네슬레 직원의 아내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급의 형태로 매월 2,040달러를 뇌물로 제공하였다.

2017년 싱가포르 법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더불어 뇌물수수액 (62,071달러)만큼 벌금을 추징하고 추가로 4,500달러의 벌금을 선고하였으며, 뇌물을 제공한 SCAD Partners Pte.의 임원에게는 5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Businessman gets 5 months' jail for giving bribes to manager at Nestlé, The Straits Times (2017-07-21)

## 2. 말레이시아



인구 : 31,200,000명  
 면적 : 329,847km<sup>2</sup>  
 수도 : 쿠알라룸푸르  
 GDP : 3,098억\$ (세계38위)  
 언어 : 말레이어  
 화폐 : 링깃(MYR, RM)

말레이시아 내 부패는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부패 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부문 중 하나는 공공조달 부문으로, 종종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외국 기업보다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 관계가 경쟁입찰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MACC)는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법(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Act 2009)에 의해 설치된 독립 반부패 기관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의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법은 제16조, 제28조에서 공직자와 일반 국민에 적용되는 부패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적극적 및 수동적 뇌물, 갈취, 권력 남용을 포함해 폭넓은 위법 행위와 공공 및 민간부문의 부패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다.

2015년 1MDB(1 Malaysia Development Berhad, 말레이시아 개발 유한회사) 스캔들에서 나집라작(Najib Razak) 말레이시아 총리는 국영투자기업 1MDB를 통해 나랏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1MDB의 천문학적 부채가 드러나면서 비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6억8천100만 달러(약 7천600억원)의 돈이 흘러든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나 1MDB 스캔들에 연루된 나집 자락 말레이시아 총리에 대한 강경 수사를 진행하던 MACC가 2015년 8월 돌연 부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이와 함께 MACC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중도 사퇴하고, 수사 실무를 전담했던 MACC 특수조사국국장이 사임하면서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원 말레이시아 개발(1MDB) 스캔들

1MDB(1 Malaysia Development Berhad, 말레이시아 개발 유한회사)는 2009년 나집 라작(Najib Razak) 총리의 주도로 설립된 말레이시아 국영투자회사이다. 높은 부채와 불투명한 경영행태를 보이던 1MDB는 나집 총리 본인계좌로 약 7억 달러(약 7천700억원)에 달하는 1MDB 회사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혐의가 2015년에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 미국, 룩셈부르크, 스위스, 세이셸, 아랍에미리트연방(UAE),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호주 등 최소 10개국의 개인/기업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국,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스위스 사법당국은 1MDB 스캔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1MDB와 아부다비 국부펀드 IPIC(국제석유투자)는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IPIC는 2012년 1MDB가 발행한 35억 달러 규모의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주며 담보금 등을 대가로 받기로 했다. 이후 1MDB는 담보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IPIC은 지급 받지 못했이라며 런던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 65억 달러(약 7조 38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1MDB는 2017년 4월 IPIC(국제석유투자)와 분쟁종식에 합의하고, 2017년 12월 대출금과 이자를 IPIC에 전액 지급하였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스캔들 연루에 대해 나집 총리의 계좌에 들어간 돈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공된 합법적 정치기부금이라고 판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1MDB 스캔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나집 총리의 측근이자 자금세탁·관리자인 조 로우(Jho Low)와 나집 총리의 양아들 리자 아지즈(Riza Aziz)의 횡령금이 흘러들어가 17억 달러(약 1조9천억원) 규모의 미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Malaysia Reopens 1MDB Case: A Return To Asia's Biggest Corruption Scandal, Forbes (2017-10-31), 총리비자금 연루 말레이 1MDB, 중동국부펀드에 12억달러 상환, 연합뉴스 (2017-12-28)

### 3. 베트남



인구 : 92,700,000명  
면적 : 330,966km<sup>2</sup>  
수도 : 하노이  
GDP : 2,159억\$ (세계44위)  
언어 : 베트남어  
화폐 : 베트남 동(VND)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앞질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경제의 각계 각층에 부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CPI 순위(2016년 113위)를 기록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반부패 체계와 단속 강화를 목표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입법 부문에서는 2015년 개정된 형법에서 특정 부패 관련 범죄의 적용이 민간부문에 확대되고, 외국 공무원과 해외 공공 기관 직원에 대한 뇌물 제공이 범죄로 규정되었다. 기업(법인)은 개정 형법에 따라, 형법에 등재된 특정 범죄에 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뇌물과 부패 범죄는 기업을 형사책임에서 제외하고 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개정 형법의 오류와 상세 조항 미비를 지적함에 따라 2016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 형법은 몇 가지 조항의 추가 수정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또한 반부패법 역시 적용대상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규제 준수 및 뇌물 예방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다.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베트남의 부패 문제의 민낯을 숨기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최근 1만 개 베트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가 정부 관리에게 추가적인 비공식 지불을 한 적이 자주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지불이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단속 측면에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통계들을 감안할 때,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 특히 FCPA와 영국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반드시 부패 위험에 대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베트남의 '부패와의 전쟁'

베트남이 '부패와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면서 공직사회에 사정 한풍이 몰아치고 있다. 베트남 공안부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2월 단 라 탕 전 공산당 정치국원 겸 호찌민시 당 서기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의원직을 박탈당한 데 이어 공안(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2009~2011년 국영 석유가스공사(페트로베트남) 이사회 의장을 맡았을 때 경영 부실과 비위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페트로베트남의 자회사 페트로베트남건설이 추진한 화력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횡령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페트로베트남 수장 이후 교통부 장관, 정치국원 등에 오르며 정권 실세로 주목받았지만 지난 5월 이런 비위 혐의가 드러나면서 정치국원과 호찌민시 당서기장 자리에서 모두 해임됐다. 정치국은 공산당의 최고 정책결정 기구로, 현직 정치국원이 해임된 것은 20여 년 만에 처음이었다.

앞서 공산당은 10월 응우옌 쉐언 아인 다낭시 당 서기장이 사기업들로부터 차량과 주택을 받아 쓰는 등 윤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임했으며, 지난 8월에는 호 티 킴 토아 산업무역부 차관이 국영 전자업체 대표로 재직할 때 은행 대출,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된 규정 위반으로 해임됐다. 또한 쯔 쉐언 타이 전 페트로베트남건설 회장은 회사에 1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수배를 받아 독일로 도피했다가 지난 7월 붙잡혀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공직자 재산 감독 강화, 공직 활동의 투명성 제고 등 2020년까지 시행할 반부패 행동 계획을 마련하는 등 베트남 당국이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부패와 전쟁' 박차, 승승장구 실세-고위직 추풍낙엽, 연합뉴스 (2017-12-10)

## 4. 인도네시아



인구 : 252,200,000명  
면적 : 1,900,000km<sup>2</sup>  
수도 : 자카르타  
GDP : 1조 109억\$ (세계16위)  
언어 : 인도네시아어  
화폐 : 루피아(Rupiah)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2계단 하락한 90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3년 114위, 2014년 107위에 비해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도 인도네시아는 2017년 사업 하기 좋은 국가 평가로 190개국 중 2016년 109위에서 18단계 상승한 9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의 성공적인 부패척결 노력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부패방지위원회(KPK)는 2003년 설립 이후 10년 동안 유죄 선고율 100%라는 기록을 남기며 광범위한 조사 및 기소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유죄 판결인사에 국회의원, 지역 고위 정치인, 공무원, 사법부 구성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고위층과 유력인사의 부정부패를 견제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지속적으로 각계의 공격에 시달리면서 부패 처벌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정치적, 법적 장애물을 헤쳐나가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2년에는 경찰 고위간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KPK 수사관이 경찰에 연행됐고, 2015년에는 경찰이 경찰청장 후보로 지명된 3성 장군 부디 구나완의 수뢰 혐의를 조사한 KPK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서류위조와 선거 관련 위증교사 등 혐의로 체포되어 사임되었다. 이처럼 부패방지위원회(KPK)와 경찰, 검찰청간의 대립은 KPK의 기능과 인도네시아 부패 단속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가루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2017년 2월 국영 항공사 Garuda 인도네시아(Garuda Indonesia) 전 사장인 에미르시아 사타르(Emirsyah Satar)를 항공기 및 엔진조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였다. KPK는 에미르시아 사타르(Emirsyah Satar) 사장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에어버스 SAS(Airbus SAS)와 롤스로이스(Rolls-Royce Holdings Plc)로부터 50여 대에 달하는 항공기 엔진 구입을 위해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회사를 소유한 제3의 인물을 통해 345만 달러의 뇌물을 건네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불구속 되었다.

KPK는 본 사건과 관련해 23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과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CPIB)으로부터 관련 120만 유로와 18만 달러, 그리고 2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제공 받은 증거를 확인함에 따라 에미르시아 사타르(Emirsyah Satar)를 2018년 1월 재기소했다.

<Anti-Corruption Regulation – Indonesia>, Getting the Deal Through (2017), Former chief executive of Garuda airline grilled by KPK, Antara News (2018-01-11)

## 5. 태국



인구 : 68,980,000명  
 면적 : 513,120km<sup>2</sup>  
 수도 : 방콕  
 GDP : 4,378억\$ (세계26위)  
 언어 : 태국어  
 화폐 : 밧(Baht)

태국은 오랫동안 만연한 부패에 시달려 왔으나, 해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반부패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는 2015년 76위보다 25단계 하락한 101위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탄압, 독립적 감사·감독의 부재, 국민 권익의 악화로 인해 무너진 국민 신뢰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부패인식과 정치적 혼란 사이의 연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태국 정부 차원에서의 부패 척결을 위한 법적 틀 마련과 부패방지기구 설립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뇌물과 부패 행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태국의 반부패 기본법(The Organic Law on Counter Corruption)은 공직자들과 기업들의 부패행위를 불법화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들의 적극적 및 소극적 뇌물 공여를 포함한다. 형법 또한 횡령 및 불공정 거래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뇌물', '공무원', 법인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제3자'에 대한 폭넓은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법률은 국제적 기준에서도 강력한 법률이다. 그러나 국가반부패위원회(NACC)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 단속의 시행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평론가들은 군부 정권이 실제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패를 뿌리뽑기보다는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관심이 집중된 부패 사건들을 쫓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NACC가 제기한 부패 사건의 대다수는 지역 정당의 당원과 공무원이 관련된 사건들로, 민간 부문의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단속은 드문 실정이다. NACC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긴 기소 절차로 인해 성공적인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태국의 사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투명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실제적인 현장의 부패 단속 개선보다는 엄격히 통제된 정치적 환경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타이항공-롤스로이스 스캔들

2013년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은 영국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인 롤스로이스(Rolls-Royce Holdings)가 과거 30여 년간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러시아, 나이지리아,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뇌물을 뿌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영국 중대범죄수사청(SFO)에 따르면 롤스로이스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태국 정부 관리와 타이항공 직원 등 중개인에게 총 3천600만 달러(약 420억 원)의 뇌물과 성과보수를 제공했으며, 롤스로이스는 수십억 바트 규모의 항공 엔진 구매 주문에 대한 대가로 태국 관리들에게 뇌물로 12 억 달러 이상을 지불했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롤스로이스는 기소 면제 조건으로 영국 SFO, 미국 법무부, 브라질 연방정부와 8억800만달러(약 9천5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였다.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는 본 사건과 관련해 2017년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전직 장관, 의장, 대통령 및 기타 고위 관리를 포함한 26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18년 1월 반부패위원회(NACC)는 뇌물 및 부패 혐의에 대한 증거를 80% 정도 확보하였으며, 형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영국, 미국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태국 현지에서는 NACC가 해외 당국의 증거 제출을 이유로 수사과정을 지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NACC facing 'uphill task' in Rolls-Royce bribery case probe, The Nation (2018-01-05)

## 6. 필리핀



인구 : 100,980,000명  
 면적 : 300,800km<sup>2</sup>  
 수도 : 마닐라  
 GDP : 3,211억\$ (세계37위)  
 언어 : 타갈로그어, 영어  
 화폐 : 필리핀 페소

필리핀의 심각한 부패 수준은 필리핀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효율성을 극심하게 떨어뜨린다. 필리핀은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TI)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1위를 기록하였으며, 세계은행에서 매년 공표하는 국가관리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 WGI)의 '부패통제' 항목에서 34.13%를 기록해 부패관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은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행정서비스 개선 등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높였으나, 공공부문 내에서 이뤄지는 광범위한 뇌물수수 및 각종 인허가 등을 둘러싼 공무원 또는 경찰관의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 복잡한 세관 통관, 자의적인 법률 해석과 길고 불공정한 분쟁처리 등을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청탁금지법(Anti-graft law) 및 부패행위 방지법(Corruption Practices Act)은 적극적 및 소극적 뇌물, 갈취, 직권 남용 및 이해 상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 관습에 따른 약소한 선물을 제외하고는 선물 제공이 금지된 반면, 급행료 지급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필리핀의 주요 반부패 기관인 옴부즈만 사무소(Office of the Ombudsman)에서 추적한 최근의 부패 사건들은 고위층의 부패 사건을 단속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필리핀 내에서는 반부패 법률의 단속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며, 옴부즈만 사무소가 부패 행위자를 조사, 기소하기 위한 자원이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 전 수준에서 부패 해결'이라는 공약 아래 2016년 필리핀 대통령으로 당선된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통령궁에 직접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유착방지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부패 척결에 앞장선 두테르테 대통령 또한 2017년 안토니오 트리야네스 4세 상원의원에 의해 다바오시장 재직 당시 24억 페소(약 530억원) 비자금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대통령 일가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두테르테 대통령은 옴부즈만 사무소의 내부 부패 의혹을 조사하는 기구를 조성할 것을 시사하고 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옴부즈만 사무소,  
 에너지규제위원회(ERC)  
 최고위원 4명 기소

2017년 12월 옴부즈만 사무소(Office of the Ombudsman)는 필리핀 최대 전력회사인 메랄코(Manila Electric Co., Meralco)가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자체 인상한 전기 요금을 징수하도록 눈감아준 일에 대해 필리핀 에너지규제위원회(ERC) 최고위원 4명 전원에게 1년 정직을 명령했다. 또한 메랄코를 전력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사업자 경쟁 입찰기회를 연장한 혐의로 전 에너지규제위원회(ERC)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을 형사 처벌하도록 지시했다. 옴부즈만 사무소는 ERC 임원 다섯 명을 필리핀 부패방지법 제3조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Ombudsman suspends 4 ERC commissioners, Inquirer.net (2017-12-22)

## 7. 라오스



인구 : 6,492,400명  
면적 : 236,800km<sup>2</sup>  
수도 : 비엔티안  
GDP : 171억\$ (세계113위)  
언어 : 라오어  
화폐 : 키프(LAK, Kip)

라오스는 부패 리스크가 높은 시장 환경으로 인해 기업 진출과 해외투자가 저해되고 있다. 모든 부문에서 정치적 후원과 공직자들에 대한 금품 지급이 만연하며, 1975년 공산화 이래 라오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의 일당 집권체제가 유지되면서 부패문화가 고착화 되었다. 특히 소규모의 뇌물수수가 빈번해 기업들은 해외거래를 진행하거나 세금납부, 공공서비스 취득 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라오스의 반부패법(The Law Against Corruption)은 공공부문에서의 직권남용, 횡령, 수동적 뇌물수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직자들이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여기에는 약하고 비효율적인 사법부가 반부패법 시행 지연의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2016년 라오스의 정권교체는 정부 최고위 인사의 부패스캔들에서 촉발되었다. 통싱 전 총리 재임 시절 재무부 장관 겸 전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4명의 고위관료가 유령 프로젝트를 진행한 혐의로 2015년 12월 체포되면서, 전 통싱 탐마봉(Thongsing Thammavong) 총리는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뒤이어 취임한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 총리는 2016년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법체제 확립'을 포함하는 사회경제개발 계획(National Vision 2030)을 발표하고,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였다. 라오스의 CPI 순위는 2015년 139위(178개국 중)에서 2016년 123위(176개국 중)로 16계단이나 상승하였다.

## 8. 미얀마



인구 : 51,480,000명  
면적 : 676,563km<sup>2</sup>  
수도 : 네피도  
GDP : 669억\$ (세계72위)  
언어 : 미얀마어  
화폐 : 차트(Kyat)

부패는 미얀마의 고질적인 문제로, 기업들의 높은 부패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다. 많은 기업인들은 부패와 약한 법치와 복잡하고 불투명한 허가제가 미얀마 내에서의 투자 및 거래를 어렵게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가 부패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 부문에서 부정부패행위가 깊숙이 남아있다. 미얀마는 2015년 11월 첫 총선을 실시하며 50년간의 군부정권을 끝냈다. 아웅산 수지의 민주국민연맹이 압도적인 득표로 승리하면서 미얀마가 이전의 고립상태에서 개방으로 나아갈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948년 제정된 부패방지법(Suppression of Corruption Act)은 형법상 뇌물공여죄를 비롯하여 여러 법규상 등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오랜 군부 독재와 만연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인해 부패 관련 규정은 실효성을 상실하였다. 2012년 시장개방 이후 미얀마 정부는 2013년 유엔반부패협약(UNCAC)과 동남아 국가 반부패연합(South East Asia Parties Against Corruption, SEA-PAC)에 가입하면서 2013년 부패방지법(Anti-Corruption Law)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부패방지법(Anti-Corruption Law)은 직권남용과 부패미수, 그리고 공공부문의 적극적 및 수동적 뇌물공여를 법으로 금하고 있으며, 급행료는 법률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불법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다. 선물 제공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특정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2016년 4월 미얀마 대통령실은 '공무원 선물수취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뇌물로 해석되지 않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수수되던 선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적용 대상을 미얀마 정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이 포함된 정부 위원회 멤버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현지 정부 공무원에게 선물 제공 시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 2018년 미얀마 정부는 국유재산의 남용을 막고 기존의 부패방지법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 9. 캄보디아



인구 : 15,957,223명  
면적 : 181,035km<sup>2</sup>  
수도 : 프놈펜  
GDP : 222억\$ (세계107위)  
언어 : 크메르어  
화폐 : 리엘(KHR)

캄보디아는 1인당 GDP가 1,200달러 수준으로 저개발국에 속하나, 외국의 원조자금 및 외국기업 투자의 유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7%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고성장 국가이다. 캄보디아는 2016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에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낮은 156위를 기록하였다. 만연한 부패와 각종 행정의 불투명성, 법적 구제제도의 불완전성 등은 기업이 캄보디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법부의 인력 부족과 불충분한 재원은 공무원의 부패와 낮은 해외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의 부패방지 법제는 크게 형법(2009)과 반부패법(2010)로 구성된다. 형법 제42조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적극적·수동적 뇌물공여, 사적이득 및 갈취를 위한 직권남용을 금하고 있다. 선물에 대한 금액 한도는 없으나, 부정한 의도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캄보디아에서 급행료는 금지되나 기업들은 선물과 급행료 지급이 일반적이라고 평가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2010년 반부패법(Law on Anti-Corruption)을 제정하고,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인 반부패청(Anti-corruption Unit, ACU)을 설립하였다. 반부패청(ACU)은 반부패 법규의 시행과 함께 공공 및 민간 기관의 부패신고 접수, 조사, 감독,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공직자 재산신고 실시 및 부패혐의가 있는 고위인사(경찰, 사법부 등)들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등 기업 관련 뇌물수수 관행 척결, 공공기관 수수료 투명화 등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2017년 3월 반부패청은 100여개가 넘는 기업으로부터 5달러에서 1,000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수개월 간 갈취한 혐의로 후이 호은(Huy Hoeun) 내무부 부국장을 체포하였다.

## 10. 브루나이



인구 : 417,394명  
면적 : 5,765km<sup>2</sup>  
수도 : 반다르스리브가완  
GDP : 120억\$ (세계128위)  
언어 : 말레이어, 영어  
화폐 : 브루나이 달러(BND)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41 위를 차지한 브루나이는 타 아세안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부패 정도가 낮은 편이다. 브루나이의 반부패 법제는 부패예방법(Prevention of Corruption, 1982년 제정/1984년 개정)을 기본으로 한다. 브루나이 정부는 부패예방법 제131장에 의거하여 법 시행을 위한 부패방지국(Anti-Corruption Bureau, ACB)을 설립하였다. 부패 조사와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패방지국(ACB)은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절차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법무장관실의 검사차장이 부패 관련 기소를 담당함으로써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경제의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Special Page: ASEAN 주요국의 부패방지기구 비교

구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기관 명칭	부패방지위원회 (MACC)	부패방지위원회 (NACC)	부패방지위원회 (KPK)	부패방지 중앙지도위원회 (OSCAC)	반부패처 (ACU)
설립 근거	부패방지위원회법 (2009)	개정헌법 (1997) 부패방지위원회법 (1999)	부패방지법 (1999)	부패방지법 (2006)	반부패법 (2010)
설립 연도	2009년 *1967년 설립된 반부패청 후속	1999년 * 1975년 설립된 옛반부패위원회 후속	2003.12월	2007.1월	2010년 *1999년 설립된 옛반부패처 후속
소속 ·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리 소속</li> <li>공공·민간 부패조사</li> <li>반부패 교육·홍보</li> <li>부패방지 정책 입안</li> <li>공직자 청렴도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기관, 국왕이 임명</li> <li>고위공직자 재산심사</li> <li>고위공직자 부패 및 부정축재 조사 후 직위박탈, 형사소추·징계</li> <li>제도개선권고, 청렴윤리의식 고양, 시민사회 협력 등 부패예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소속</li> <li>부패행위 수사·기소</li> <li>공무원 재산 신고 기록·확인</li> <li>반부패 교육·홍보 및 시민 협력,국제협력</li> <li>부패유발 제도 개선 권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리가 위원장, 부총리가 부위원장 임명</li> <li>전국적인 부패예방업무 주도·조정·감독</li> <li>부패사례 감시</li> <li>부패고발 처리</li> <li>부패방지 교육 및 정보 확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신고 접수·조사·감독·처리</li> <li>부패 신고자의 신분 비밀 유지 및 신고자의 안전 보장 조치</li> <li>재산 및 부채 신고 시스템 관리</li> </ul>
조사권 보유 여부	부패전담수사권 (긴급사 무영장 압수수색권, 계좌추적권, 특수한 경우 무영장 체포권)	조사권 보유	부패행위 수사 및 기소(위원회가 수사한 부패사건은 '반부패 특별법원'에 직접 기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 혐의자의 금융계좌 추적</li> <li>부패 혐의자의 전화 통화 감청, 물적증거 수집</li> <li>부패 혐의자 등 소환 및 부패혐의 자산의 동결</li> </ul>
지방 조직	15개 주사무소 9개 지역사무소	지역부방위 설치	없음	63개 지역별 지방지도위원회	

동남아시아 부패현황과 반부패정책, 국가권익위원회(2011) (2018. 1 업데이트)

# IV

## 베트남·인도네시아 반부패법 및 사례



## 1. 베트남



베트남은 떠오르는 신흥 시장으로 해외 자본 및 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계획 투자부 해외 투자국(FIA)이 발표한 해외직접투자(FDI)에 관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FDI 인가액은 미화 243억 7300만 달러, 그 해의 실행액은 15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별 인가액으로는 한국이 70억 3630만 달러로 전체의 28.9%를 차지하며 가장 큰 투자국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증가하는 해외 투자를 유인하고, 해외 기업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베트남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트남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2016년 33점 (100점 만점)으로 전체 172개국 중 113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기업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뇌물, 정치 간섭, 급행료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토지 관리, 건설 부문과 행정은 특히 부패에 취약하다.

베트남의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로는 2005년 제정된 **반부패법(Anti-Corruption Law)**과 1999년 제정되고, 지난 2015년 개정된 **형법(Penal Code)**과 **선물의 제공과 수수에 대한 결정 64호** 등이 있다. 베트남 형법과 반부패 법은 부패의 시도, 급행료 강요, 직권 남용, 사기, 돈세탁 등 적극적 부패(뇌물 공여, 제안, 약속)과 소극적 부패(뇌물 수수, 요구)의 형태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부패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조치는 부패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에서 최대 사형까지 적용된다. 2015년 개정된 형법(2015 Penal Code)에서는 특히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민간 부문과 외국 공무원 및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뇌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6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 형법은 몇 가지 조항의 수정을 거쳐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2005년 제정된 반부패법은 공무원 및 공직자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로 여겨지며, 공공 부문의 부패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의 개정과 맞춰 반부패법 역시 민간 부문까지 적용대상 확대를 포함한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 2016년 말, 민간 부문의 적용과 자산의 투명성 및 회계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공개되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 부패 관련 주요 법률

- 형법 (2018. 1. 1 개정 형법 시행)
- 반부패법 (2016년 말 개정안 공개, 현재 국회 계류 중)
- 간부 및 공무원에 관한 법률
- 공공부문 직원에 관한 법률
- 정부출연 조직 및 간부, 공공부문 직원과 공무원에 대한 선물의 제공, 수수 및 전달에 관한 2007년 5월 1일 총리 결정 제 64호("결정 64호")
- 반부패법 시행을 위한 2013년 6월 17일의 정부 조례 제 59호("결정 59호")
-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 베트남 반부패 행동계획 2020

<반부패 행동계획 2020>은 2020년까지 반부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베트남의 국가 전략으로 2009년 공표되었다. 반부패 국가 전략 및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의 효과적인 이행을 목표로 하며, 2017년 APEC 회의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8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행방안 (8대 과제)

- (1) 임직원, 공무원, 기관 및 단체의 장의 역할과 책임을 증진한다.
- (2) 공무원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조직의 규정 및 정책을 이행한다.
- (3) 공무원의 자산 및 수입을 모니터링 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
- (4) 사회·경제 관리 기관을 설립하고, 반부패 이행의 효율성을 증진한다.
- (5) 관리, 감독, 조사, 회계, 기소와 재판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고,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부패 자산의 회복을 추진한다.
- (6)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제고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 (7) 반부패 이슈를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 기능, 업무를 통합한다.
- (8) 반부패법의 범위를 민간 부문까지 확장하고, 국제 공조의 효율성을 촉진한다.



 <p>사법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영향, 투명성 부족, 취약한 법률 체계 등으로 인해 법원의 기능이 제한적이며, 사법체계의 부패 위험성이 큼</li> <li>- 사법부는 베트남공산당(VCP)에 의해 전적으로 좌우되며, 제도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독립성이 없고, 경험 부족의 문제가 빈번함</li> <li>- 형사, 행정, 민사 등 모든 영역에서 부패와 외부 영향력에 취약하며, 시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음</li> <li>-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1958)을 비준하였으며, 현재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ICSID) 가입을 검토중임</li> </ul>
 <p>경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들의 경찰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낮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은 경찰이 부패했다고 생각함</li> <li>- 책임성과 내부 통제 체계는 정치적 영향에 의해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에 의한 권력 남용과 면탈의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됨</li> </ul>
 <p>공공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는 특히 급행료와 선물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패의 위험성이 매우 큼</li> <li>- 시민들은 국가 인사의 정실주의, 공공 부문의 뇌물이 만연함을 지적하며, 부패에 맞서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함</li> <li>- 관할권과 행정 절차가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과 투자에 대한 통제권을 놓고 공공기관들이 경쟁을 벌임에 따라 업무 중첩의 가능성이 있음</li> <li>- 기업은 공무원의 의도적인 절차 지연, 잘못된 규정 적용, 절차에 대한 설명 미비 등 비공식적인 비용 청구를 위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흔하게 겪을 수 있음</li> </ul>
 <p>토지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의 사적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은 토지를 임대하거나 사용권을 얻기 위해 정부 기관을 거쳐야 하고, 여기에서 국가의 개입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li> <li>- 특히 베트남 기업과 경쟁하는 경우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갱신해 주어야 하는 허가에 대하여 외국 기업에게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li> <li>- 부동산 등록과 건축 허가 처리에는 지역 평균보다 짧은 시간이 소요됨</li> </ul>
 <p>조세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은 조세 규제 및 세율을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으며, 급행료와 같은 비공식적인 지불과 선물을 가장 많이 받는 부문으로 나타남</li> <li>- 세금 납부에 소요되는 시간은 지역 평균에 비해 두 배나 더 길고, 지역의 다른 어떤 국가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듦</li> </ul>
 <p>세관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과 공항의 통관 절차에서 급행료 등 뇌물 요구가 매우 빈번함</li> <li>- 기업들은 번거로운 수입 절차와 세관의 부패가 수입에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함</li> </ul>
 <p>공공조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조달 분야의 부패가 만연하여, 절반 이상의 투자자들이 베트남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뇌물과 커미션을 제공한다고 답함</li> <li>- 기업들은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편파주의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함.</li> <li>-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자신 또는 친인척을 기업의 간부로 임명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li> </ul>
 <p>천연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의 천연자원 사업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됨</li> <li>- 광산업체의 경우 연출에 의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고, 계약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li> <li>-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ITI) 가입을 10년 넘게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미가입 상태임</li> </ul>
 <p>미디어 및 시민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그러한 권리를 지향하는 조직 또는 집단은 금지되는 경우가 흔함</li> <li>- 외국의 개발 원조를 받는 국제 및 국내 NGO의 등록 절차는 까다롭고 정치화되어 있음</li> <li>-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법 및 국가모독법 등을 이용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제한함</li> <li>- 정보의 자유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엄격히 제한되므로, 베트남 언론은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li> </ul>



## 베트남 형법 (Penal Code)

베트남 형법에서는 공공 부문의 뇌물 수수죄와 뇌물 공여죄를 모두 처벌하고 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뇌물 및 외국 공무원과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뇌물 수수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형법에는 처벌 조치가 규정되어 있는데, 부패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 재산 몰수, 직위 상실, 징역, 최대 사형까지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집행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2015년 개정된 형법은 2016년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몇 가지 조항의 수정을 거쳐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 1) 공공 부문의 부패

#### ■ 뇌물의 정의

뇌물은 형태를 불문하고 2백만 동(약 90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뇌물 공여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공직 또는 업무에 권한을 가진 자에게 제공·제안·약속된 금전, 자산 또는 기타 물질적 이득을 말한다.

#### 가. 뇌물 수수죄

베트남 국내 공무원 또는 공직자가 뇌물의 정의에 해당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득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뇌물 수수죄에 해당한다.

제공된 경제적 가치가 2백만 동(약 90 달러)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죄로 규정하고 있다.

- 1)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2) 위반자가 유사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3) 위반자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부패 범죄로 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나. 뇌물 공여죄

금전 및 비금전적 형태의 2백만 동(약 90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뇌물을 공무원 및 공직자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공 또는 제안하거나, 또는 2백만 동 이하라 하더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뇌물 공여죄에 해당된다. 뇌물의 공여는 직접 전달하지 않고 중개인을 통해 제공하더라도 범죄는 성립된다.

뇌물 공여죄의 형사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조건이 증명되어야 한다.

- 1) 뇌물 수수자가 공권력을 가짐
- 2) 현금, 재산, 또는 금전적 이익이 수수자에게 전달되어야 함
- 3) 뇌물 수수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4) 뇌물의 가치가 형사 책임 기준 금액 (2백만 동 이상)이어야 하며, 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
- 5)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증거 또는 반복적인 위반 행위라는 증거가 있어야 함

## ■ 적용 대상

“국내 공무원”의 개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간부: 일정 임기 동안 국가기관에서 공식 직위 또는 직함을 갖도록 선출, 승인, 임명된 베트남 국민
- 고위 공무원: 국가기관의 지위, 직위 또는 직함에 무기한의 임기 동안 채용·임명된 베트남 국민. 국가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지도자 및 관리직
- 공공부문 직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공공기관 (예: 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고용 계약에 따라 채용된 베트남 국민
- 군대 및 국가안보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 공기업 대표 및 경영진, 기업에서 국가 자본을 대표하는 자
- 공적 임무 또는 과업을 수행하도록 배정되어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 자

\* 공기업의 일반 이사, 부이사, 이사회 구성원, 감사위원회 구성원, 회계 책임자, 전문 부서 또는 단위의 장과 차장은 공무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국은 실제로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폭넓은 해석을 채택할 수 있으며 공기업에서 이러한 기타 직위를 보유한 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 ■ 법적 제재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자연인)만이 형사 책임을 가지며 범죄 행위에 따른 처벌은 아래와 같다.

- 뇌물 수수죄: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및 공직자는 최대 1억 동 of 벌금과/또는 무기징역까지의 징역형, 최대 사형<sup>1</sup>까지 선고 받을 수 있으며, 뇌물 또는 부패행위로 제공된 자산 및 금전적 이득은 몰수된다. 또한 향후 5년간 공직 근무가 제한된다.
- 뇌물 공여죄: 뇌물을 제공하거나 중개인 역할을 한 경우, 최대 5천만 동 of 벌금과/또는 1년에서 20년까지의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 강압에 의해 뇌물을 제공한 경우 이를 당국이 적발하기 전 자발적으로 보고할 경우 무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뇌물로 제공한 자산 역시 반환 받을 수 있다.



## 2) 외국 공무원 대상 부패

반부패법 및 형법은 외국 공무원이 아닌 베트남 국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뇌물 (해외에서 제공되었더라도 적용)만을 처벌하였으나, 개정 형법은 외국 공무원 및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뇌물 공여도 범죄로 규정하였다.

### ■ 뇌물의 정의와 법적 제재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외국 공무원 및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뇌물의 공여도 공공 부문과 동일한 뇌물의 정의에 대한 조항(Article 364)을 적용 받는다. 단, 뇌물 수수자에 대한 처벌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뇌물 공여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과/또는 6개월에서 20년까지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sup>1</sup> 기존의 형법에서는 5억동 (약 2,500만원) 이상을 횡령하거나 3억 동(약 1,5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사형에 처한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형법 재개정안(Amended 2015 Penal Code)에서는 사법당국의 범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범죄자는 사형을 피할 수 있다. 또한 75세 이상의 범죄자 및 부패 혐의자 중 자발적으로 부정취득액의 75%를 반납한 경우 사형이 면제될 수 있다.

### OECD 뇌물방지협약 비준 및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

베트남은 유엔반부패협약(UN Convention on Anti-corruption, UNCAC)에 가입하였으나, 1999년 제정된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에 관한 협약(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이하 OECD 뇌물방지협약)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2017년 3월 베트남은 러시아와 함께 OECD 뇌물방지협약에 관해 논의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러시아는 2011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불법으로 하는 법안을 발효했으며, 2012년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하였다. 본 워크숍에서 베트남은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러시아의 선례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베트남의 반부패법의 개괄을 설명하고 반부패 활동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개정 형법과 워크숍 사례 등에서 보여지듯 베트남 정부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국제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3) 민간 부문의 부패

민간 부문의 부패는 반부패법 및 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2015년 개정된 형법에 따라 부패 범죄의 적용이 민간 부문까지 확대되었다. 개정 형법은 2016년 7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몇 가지 조항의 수정으로 인해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일이 연기되었다.

#### ■ 뇌물의 정의와 법적 제재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민간 부문도 공공 부문과 동일한 뇌물의 정의에 대한 조항(Article 354 및 364)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2018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 및 기관의 임직원 역시 횡령, 뇌물 공여죄와 수수죄 및 뇌물 중개 등 부패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가진다. 뇌물의 기준 금액은 2백만 동으로 동일하다.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개인(자연인)만이 형사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다음과 같다.

- 뇌물 수수죄: 최대 사형/무기징역까지의 징역형 및 최대 1억 동의 벌금
- 뇌물 공여죄: 최대 20년까지의 징역형 및 최대 5천만 동의 벌금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재개정 형법(Amended 2015 Penal Code)에는 32가지 유형의 특정 범죄(탈세, 보험업 사기, 부정경쟁, 지적재산권 침해, 돈세탁 등)에 대해서는 기업(법인)의 형사 책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 관련 범죄는 법인의 형사책임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의 형사책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만 적용되며, 국가기관, 정치 조직, 사회 단체와 같이 주목적이 영리 추구가 아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재개정 형법은 외국법인 역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형사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 1) 베트남 국민 및 베트남 전반의 이익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2) 베트남이 비준국으로 있는 국제협정의 조항을 위배하는 경우

- 법인의 형사책임 입증 조건: 법인의 형사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 불법 행위가 기업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야 함
  - 불법 행위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자행되어야 함
  - 불법 행위가 기업의 승인 또는 지시 하에 자행되어야 함
  - 불법 행위가 공소시한의 규정 내에 있어야 함
- 법인의 처벌
  -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벌금, 영업 종료 및 정지, 특정 사업 활동 및 자금 모금 금지(1년~3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형사 책임이 개인의 범법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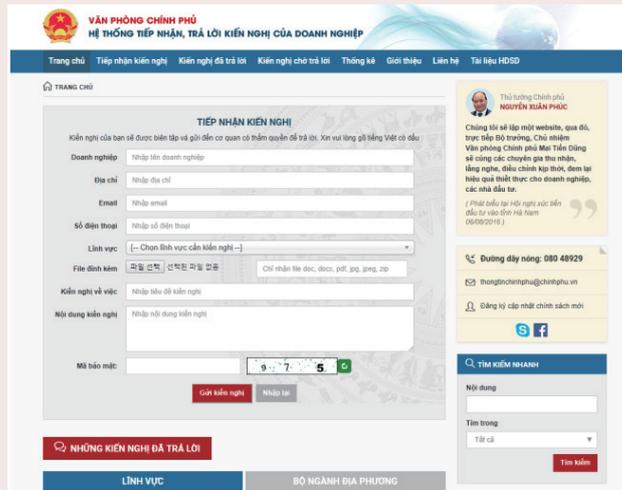
### ※ 법인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

<b>화폐 위조 및 관련 범죄</b>	(i) 밀수 (188조); (ii) 국경 간 물품 및 돈 밀매 (189조); (iii) 금지된 상품/원자재 생산 및 거래(190조); (iv) 금지된 상품/원자재 보관 및 수송(191조); (v) 위조 식품/식량/첨가물 생산 및 거래 (192조); (vi) 치료 및 예방용 위조 약품 생산 및 거래 (193조); (vii) 위조 사료/비료/수의약품/농약/식물종/동물종의 생산 및 거래 (195조); (viii) 사재기 (196조); (ix) 탈세 (200조); (x) 청구서 및 영수증 불법 인쇄/배분/거래 (203조)
<b>지적 재산권 범죄</b>	(i)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 (225조); (ii) 공업 소유권 침해 (226조)
<b>부정경쟁 범죄</b>	경쟁 관련 법률 위반 (217조)
<b>보험 범죄</b>	(i) 보험업 사기 (213조); (ii) 직원 사회보험/건강보험/실직보험금 미지급 (216조)
<b>보안 범죄</b>	(i) 보안 활동 관련 정보 은닉/가짜 정보 제공 (209조); (ii) 내부 정보를 이용한 보안 거래 (210조); (iii) 주식 사재기 (211조)
<b>환경 범죄</b>	(i) 천연자원 측량/답사/추출 법률 위반 (227조); (ii) 삼림 자원 추출 및 이용 법률 위반 (232조); (iii) 야생 동물 관리 및 보호 법률 위반 (234조); (iv) 환경 오염 야기 (235조); (v) 환경적 비상사태 예방/대응/구조 법률 위반 (237조); (vi) 관개/독 등의 자연재해 예방 작업에 대한 법률 위반; (vii) 하천 제방 보호 법률 위반 (238조); (viii) 베트남 영역으로의 폐기물 반입 (239조); (ix) 수자원 파괴 (242조); (x) 삼림 파괴 (243조); (xi) 멸종위기/희귀종 관리 및 보호 법률 위반 (244조); (xii) 야생 동물 보호 구역 관리 법률 위반 (245조); (xiii) 외래종 수입 및 확산 (246조)

## 베트남 내 활동 기업을 위한 애로사항 접수 웹사이트

2016년 10월, 베트남 정부가 총리 관할 하에 뇌물 및 부정 부패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본 사이트를 통해 피드백과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사이트 주소 <http://doanhnghiep.chinhphu.vn/> (베트남어로만 운영)  
 핫라인 +84-80-48929  
 이메일 [thongtinchinhphu@chinhphu.vn](mailto:thongtinchinhphu@chinhphu.vn)



### 자회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책임



형법에서는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인의 형사 책임을 적용하나,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만이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자회사는 통상적으로 모기업과 별개의 법인으로 간주되므로 자신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는다. 하지만 최근 베트남은 계열사 및 자회사가 부패 행위에 깊숙히 연루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자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계열사의 반부패 프로그램과 규제 준수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중개인을 통한 뇌물의 처벌



형법은 중개인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뇌물을 수수한 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부과한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며 대리인 및 중개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들의 활동에 위법사항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주기적으로 제3자 실사를 수행하여 뇌물 공여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

### 급행료 금지



공무원이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할 의도를 가진 급행료를 제안/지불하는 경우 급행료 수수에 대한 처벌 면제는 없다. 결과적으로 일어난 행동이 적법한 것이라 할지라도 급행료를 수수하는 자는 형법에 따라 여전히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지만 급행료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급행료를 요구 받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여, 기업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및 직원 교육 등의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 베트남 반부패법의 최근 동향

형법 개정에 이어 2016년 말 제 1차 반부패법 개정안(“개정안”)이 공개되었다. 부패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나, 민간 부문으로의 적용 대상 확대와 자산의 투명성 및 회계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 1. 반부패법을 기업 경영진에도 적용**

개정안은 그 적용 범위를 공공 부문에서 영향력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지도자 및 경영진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는 뇌물에 대한 제재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있는 개정 형법과 일치되는 부분이다.
- 2. 기업의 규제 준수 책임**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장으로서 기업의 반부패 규제 준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반부패 기업 문화 구축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기업은 부패를 예방, 적발, 처리하고 기업 내 지도자 및 경영진의 자산/수입을 공개하기 위한 행동 강령 및/또는 내부 통제 체계를 발표할 것을 요구 받는다.
- 3. 선물의 제공과 수수 기준**

정부출연 조직 및 간부, 공공부문 직원과 공무원에 대한 선물의 제공, 수수 및 전달에 관한 2007년 5월 1일 총리 결정 제 64호(“결정 64호”)는 국가 공무원과 공직자에 관한 선물 제공 및 수수와 관련한 지침 역할을 한다. 결정 64호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자는 제한된 특정 상황과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물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안에는 선물의 제공과 수수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과 공직자는 최대 2백만 동(USD 약 100만 달러)의 선물 및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며, 선물의 가치가 2백만 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규제(“결정 64호”의 기준은 50만동)와 비교해 공무원과 공직자의 선물 수수에 대해 보다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
- 4. 자산 공개 및 투명성 강화**

또한 개정안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직자의 수입/자산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을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과 공직자의 수입/자산을 조사하는 당국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직자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자산/수입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Key Changes to Vietnam's Draft Anti-Corruption Law, Baker McKenzie (2016)





## 기업 위반 사례

### PCI (Pacific Consultants International)



Thai Binh Duong 자문사인 일본 건설 컨설팅 대기업 PCI사 간부들이 호치민시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였다. PCI 회장을 포함한 4명의 간부들이 일본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으로 집행된 호치민 동서대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베트남 간부에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약 82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 제공을 위해 경비 처리 서류를 조작하였다.

#### 결과

-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이 베트남에 대한 ODA 원조를 잠정 중단하였다.
- 베트남 법원은 동서대로 프로젝트 총괄에게 설계 컨설팅 10%와 시공감리 수수료 11%의 합인 26만 2천 달러를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 프로젝트 총괄은 최고형인 사형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2010년 종신형을 구형 받았고, 이후 2011년 항소법원(appeal court)에서 20년으로 감경 받았다.
- 2008년, 일본에서는 PCI 전 임원 3명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본법원은 86만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유예하였고,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았다.

#### 후속조치

- PCI 사건 이후,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반부패 상담 데스크를 개선하고, 반부패 가이드라인을 다국어로 발간하는 등 부패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베트남과 일본은 ODA 부패 재발을 막기 위한 반부패 공동위원회를 만드는 등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베트남 교통부 차관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대표와 만나 관련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 공개를 약속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철도뿐만 아니라 JTC가 참여하고 있는 ODA 프로젝트 모두를 조사하였으며, 동시에 건설교통부는 부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조직 자체도 점검하였다.

### 일본교통기술(JTC)



일본 철도건설업체인 JTC 임원 3명은 4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대가로 베트남 철도회사 공무원에게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약 49만 5천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JTC는 베트남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철도설계사업 등에서 ODA 사업 수주를 위해 약 1억엔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

#### 결과

-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이 베트남에 대한 ODA 지원을 잠정 중단하였다.
- 사업 주체인 베트남 철도청이 차장급 2명의 직위를 해제하고, 해당 사업의 담당자를 파면하였다.
- JTC로부터 뇌물을 받은 베트남 철도청 부사장을 포함한 6명이 체포되었고, 부사장은 7년 6개월, 임원 5명은 각각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 2014년 일본법원은 JTC의 벌금을 9천만엔으로 제한하고, JTC의 임원 3명에게 각각 2년 징역 3년 집행유예를, 3년 징역에 4년 집행유예, 2년 6개월 징역에 3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일본국제협력기구는 베트남과의 ODA 관련 부패가 3번 발생할 경우 베트남 ODA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오션뱅크(OceanBank)



###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



오션뱅크는 2010년~2014년 국영 석유가스공사인 페트로베트남의 3개의 자회사를 비롯한 4천여개의 기업과 5만여명의 개인에게 중앙은행 규정보다 많은 예금 이자를 지급하여 1억 6000억 동(약 804억원) 가량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하 반 탐(Ha Van Tham) 오션뱅크 전 회장은 재산횡령죄, 경제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 금융 기관의 대출 업무에 관한 규정을 어긴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또한 응우예 쉐언 썬(Nguyen Xuan Son) 페트로베트남 전 회장은 페트로베트남이 지분 20%를 보유한 오션뱅크의 자금 2,460억 동(약 124억원)을 횡령 및 유용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썬 페트로베트남 전 회장은 부정 대출과 부외 이자 계산에 따른 재산 횡령죄로 2017년 사형을 선고 받았고, 2018년 1월 다시 재판을 앞두고 있다.

#### 시사점

- 1천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초래한 오션뱅크와 페트로베트남이 연계된 부패 스캔들은 비리 규모가 큰 것은 물론 피고인 51명을 포함해 사건 관련자가 700명을 넘는 베트남의 역대 최대급 재판으로 주목받고 있다.
- 오션뱅크와 페트로베트남 전 최고 경영자들이 모두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 받는 등 부패 행위의 책임자에게 매우 무거운 형량을 부여하고 있다.
- 또한 페트로베트남의 전 이사회 의장이자 정치국원 겸 호치민시 당 서기관인 딘 라 탕 역시 부패 스캔들로 인해 정치국원에서 해임되었고, 최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상 문제가 아닌 비리문제로 당최고기관인 정치국원이 해임된 일은 도이머이 정책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베트남 정부의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CDM 스미스(CDM Smith)

보스턴 엔지니어링 회사 CDM스미스는 베트남에서 세계은행이 출자한 다낭 인프라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하도급 계약에 대한 공의무를 위배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가 부과되었다.

- CDM스미스는 세계은행으로부터 해결협정에 의해 1년 6개월동안 제재를 받았다. 해결협정은 CDM스미스가 '세계은행 청렴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World Bank Group Integrity Compliance Guidelines)'에 따라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rporate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향후 세계은행의 반부패 사업에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으로부터 퇴출 및 제재를 받은 기업 목록에 기재되었다.
- CDM스미스는 2017년, 1년 6개월 간 세계은행 “조건부 불제재(conditional non-debarment)” 대상이 되었다. 조건부 불제재 대상이란 협상을 통한 합의한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한해 세계은행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만일 CDM스미스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자동으로 배제 대상이 되지만, 해당 조건을 잘 이행한다면 조건부 불제재 기간이 15개월로 단축될 수도 있다.

### 후속조치

세계은행의 조건에 따라, CDM스미스는 세계은행 청렴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World Bank Group Integrity Compliance Guidelines)에 충족하도록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준법지원인을 임명하여 전 임직원들이 준법마인드를 고취하고,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모든 이슈를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 또한 세계은행의 반부패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시사점

세계최대 발주 주체인 세계은행의 부정기업에 대한 배제 동향에 주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세계은행이 발주한 프로젝트가 연계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제재가 이루어지지만, 제재 대상을 다른 국제금융기구 및 각국 수사기관에 공유하고 언론에도 적극 배포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세계은행의 윤리기준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기업과는 거래 개시 거절 또는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과 같이 부패 리스크가 큰 지역의 인프라 사업에 입찰 시 현지 관행에 따른 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현지 리스크를 반영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지 활동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 기업 우수 사례

### 비나밀크(Vinamilk)



#### 소개

- 국제투명성기구의 2017년 "Transparency in Corporate Reporting: Assessing the 30 largest companies in Vietnam"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국영유제품회사 비나밀크가 FPT와 함께 조직 투명성을 잘 실현하는 기업으로 꼽혀, 베트남뿐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충족하는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 비나밀크는 또한 포브스 베트남에서 2017년, 2016년 2년 연속 베트남 40대 기업 리스트 중 브랜드가치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 베트남 투자 리뷰 (VIR) 주관 하에 열린 2017 제10회 베트남 연간 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어워즈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리스크 관리

-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단계: '수립-실행-모니터링'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전사적인 리스크 포트폴리오: '운영 및 전략실행 / 제품 / 인적자원 / 재무 / 환경 / 위기관리 / 컴플라이언스'에 이르기까지 자사운영의 전 부문에 전사적으로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

#### 가. 리스크 포트폴리오 리뷰(Risk portfolio review)

비나밀크 2017-2021 전략에 부합하게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인지하며, 전략적 목적 달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각각의 담당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적합하게 배정한다.

#### 나. 통제 평가(Control evaluation)

리스크 포트폴리오 내의 모든 리스크를 대상으로 매 6개월마다 평가를 한다. 평가 방법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리스크 관리부는 다른 부서에게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교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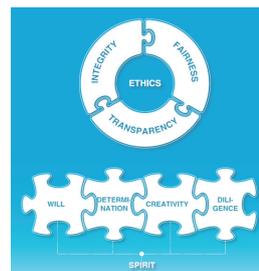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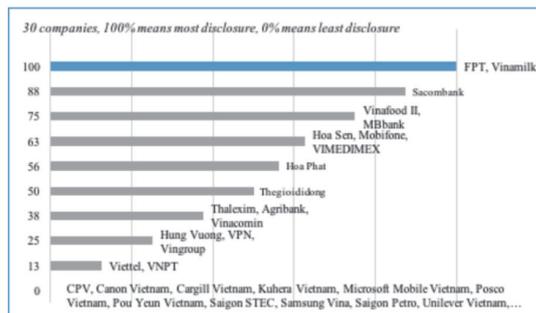
#### 다. 리스크 통합(Risk integration)

리스크 관리와 프로젝트 관리, 사건 관리, 위기 관리, 운영 연속성을 연결하여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검토하여 리스크에 기반한 내부감사가 평가와 연결성 있고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리스크 측정 분야의 설립(Establishment of risk measurement criteria)

리스크를 목적에 부합하게 정량화하고, 단계별로 나누고, 측정 방법을 결정한다. 각각의 측정된 리스크의 주요 이슈를 정의한다.

Figure 3: Company Ranking



Transparency in Corporate Reporting:  
Assessing the 30 largest companies in Vietnam (2017)

카길 베트남 법인은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17년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3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Transparency in Corporate Reporting: Assessing the 30 largest companies in Vietnam”에서 포스코 베트남 법인과 함께 반부패 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동강령**

카길은 카길 강령(Cargill Code)을 전세계의 카길 임직원 및 연계회사에 적용하여 준법 윤리 사항을 관리한다. 행동강령 보고서에서는 준법 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정의하고, 필수사항과 금지사항 및 Q&A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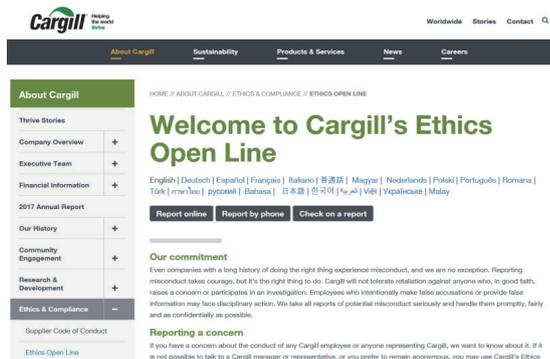
**제3자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

- Q. 최근 X국의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대금을 Z국의 제3자 은행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제3자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Z국이 거래나 고객을 위해 적합한 장소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일까요?
- A. 판매자가 주요 사업 영위국이 아닌 국가의 제3자에게 대금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우려가 될만한 사항입니다. 판매자가 카길을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사업과 관계없는 Z국에 위치한 제3자의 은행계좌에 대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는 까닭은 탈세 및 자금세탁을 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자는 판매자에게 주요 사업 영위국이 아닌 국가의 은행계좌에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카길의 정책과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만일 분명히 의견을 밝혔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매니저에게 이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재무 담당자나 비즈니스 리더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카길 준법 윤리 채널(Cargill's Ethics Open Line)**

전세계의 임직원들 및 제3자가 24시간 연중무휴로, 공급망을 포함한 전반적인 준법 윤리와 관련된 사안을 전화 및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웹사이트의 경우, 영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웹사이트: [www.cargillopenline.com](http://www.cargillopenline.com)
- 전화: (미국 내) 1-800-357-OPEN (6736)  
(미국 외) 1-1800-357-OPEN (6736)





## 2. 인도네시아



부패가 만연한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분쟁해결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재산권 보호를 약화시키는 사법부로 인해 기업의 사업 운영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에서 이뤄지는 광범위한 뇌물수수는 외국 투자자들이 우려할만한 부분이다. 세관의 부패 또한 기업들이 사업 활동 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무원들은 종종 모호한 법령을 악용하여 사업자 등록, 세금 신고, 허가 및 면허 획득 과정에서 기업에게 비공식적인 지불과 뇌물을 강요하기도 한다. 천연자원 부문 역시 취약한 감독으로 인해 부패가 만연해 있다.

부패방지에 관한 주요 법률로는 '부패 척결에 관한 법률 제 31호 (반부패법)'과 '뇌물에 관한 법률 제 11호 (뇌물방지법)'이 있다.

부패 척결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극적 뇌물과 소극적 뇌물, 직위 남용 및 강요를 포함한 주요 부패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형법은 횡령과 공무원에 대한 선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혐의가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급행료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강제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정부 차원에서 국내외 반부패 협력 확대, 정보 교류,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 공공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개혁을 통해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p>사법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 민법, 지역법은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따름</li> <li>- 독립된 사법부 그러나 정치적 영향, 뇌물수수 등 부패가 만연함</li> <li>- 부패사건에 관한 조사권·자체 검사인력뿐 아니라 기소권을 보유한 부패방지위원회(KPK), 부패사건 전담 '부패특별법원' 보유</li> <li>- 비효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 및 해석의 여지를 두는 법률이 문제점으로 지적됨</li> <li>- 사법부의 뇌물 또는 비정상적인 지불을 신고하는 내부고발 포털 보유</li> <li>- 2016년 법인체의 형사 범죄 처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 도입</li> <li>- 유엔반부패협약(UNCA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회원국,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1958) 비준</li> </ul>
 <p>경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관이 교통 위반부터 범죄 조사에 이르는 모든 수준에서 뇌물이 요구됨</li> <li>- 경찰 공무에 대한 기업 신뢰성이 매우 낮으며, 이에 따른 범죄 예방 비용, 민간 보안 서비스비가 발생한다고 응답함</li> </ul>
 <p>공공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에 대한 뇌물과 비정상적인 지불이 흔하게 발생</li> <li>- 기업들은 사업 영위의 가장 문제되는 요소로 정부 관료제의 비효율성, 투명성 문제, 복잡한 절차, 법률의 모호성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꼽음</li> <li>- 전기 서비스 이용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음</li> </ul>
 <p>토지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허가를 위한 뇌물 제공 등 토지관리의 부패가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고 지적됨</li> <li>- 사법부 부패로 재산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함</li> <li>- 불분명한 토지 소유권이 사업 시 장애가 될 수 있음</li> </ul>
 <p>조세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공무원 대상의 뇌물 제공과 같이 조세 행정에서의 부패 위험이 큼</li> <li>- 기업은 막대한 조세 회피, 세금 규제, 높은 세율이 사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함</li> <li>- 수입 규제 준수를 위한 서류 비용이 지역 평균보다 높음</li> </ul>
 <p>세관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행정 효율성, 불투명한 수출입 절차</li> <li>- 세관원이 비정상적인 지불과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잦음</li> <li>- 수입 규제 준수를 위한 서류 비용 및 소요 시간이 높음</li> </ul>
 <p>공공조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뇌물과 비정상적인 지불이 공공계약/면허 획득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li> <li>- 외국기업과 공기업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나, 공기업에 유리</li> </ul>
 <p>천연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집행 미흡으로 석유 및 광산기업의 불투명한 재무 보고 등 채굴산업 내 부패가 만연</li> <li>- 2009년 광산법 내에서 광업 계약 내용을 대중에 공개하는 조항이 삭제됨</li> <li>- 2016년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의 광업투자 선호도 평가에서 인도네시아의 정책평가 점수가 세계 109개국 중 91위를 기록함</li> <li>- 천연자원 개발 면허를 발행하는 중앙기관의 부재로 면허의 중복 발행 존재</li> </ul>
 <p>미디어 및 시민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언론 환경</li> <li>-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반역죄, 사이버 모욕죄 등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보유</li> <li>- 외국인의 언론매체 소유 금지</li> <li>- 아시아에서 시민사회가 가장 활발한 나라로 평가되며, 정책에 대한 논평과 영향력 행사 가능</li> </ul>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 관련 법규

인도네시아는 취약한 제도적 틀과 만연한 부패로 인해 부패 관련 법제의 시행이 제한되고 있다. 부패 범죄행위 척결에 관한 법률 제 31호에서는 적극적 뇌물과 소극적 뇌물, 직위 남용과 강요를 포함한 주요 부패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뇌물 공여 또는 수수는 범죄 행위로 최대 11만 달러의 벌금형과 최장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간부문의 뇌물도 범죄가 되지만 뇌물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인' 경우에 한한다. 횡령, 부패 행위의 미신고, 공무원에 대한 선물은 인도네시아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선물은 부패방지위원회(Komisi Pemberantasan Tindak Pidana Korupsi, KPK)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선물은 위법으로 간주한다. 인도네시아 형법에는 급행료에 대한 특례가 존재하지 않아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다루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민간부문의 뇌물은 뇌물로 인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주거나 의무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유발한 경우에만 반부패법에 따라 처벌된다.

법 집행 기관의 부패를 줄여나가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KPK는 뇌물과 부패 척결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뇌물 위반행위 기소 및 뇌물 방지 조치를 취하며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2012-2025 부패 예방 및 척결 국가전략'을 통해 정부관리의 부패를 억제하고 부패 행위 방지 역량 개선 및 보고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통령령 제 54/2010호는 공공조달을 위한 경쟁입찰 시 위반업체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증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패를 신고한 공공 및 민간 직원을 보호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반부패 기관 '부패방지위원회' (KPK)



인도네시아의 반부패 법률을 집행하는 주요 정무기관은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법(KPK법)에 따라 설립된 부패방지위원회(Komisi Pemberantasan Tindak Pidana Korupsi, KPK)이다. KPK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외 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2002년 법률 30호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KPK는 크게 ① 부패사건 수사 및 혐의자 기소, ② 정무기관 감사를 수행하며, 여타 법 집행기관과 마찬가지로 수사, 도청 허가, 출국금지, 재산동결, 혐의자 구속 등과 관련 관계 부처와 협의하거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 및 법무장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KPK는 공직자가 연루되거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부패행위, 10억 루피(약 9천만 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부패행위의 사건을 수사하며 부패혐의가 있는 사건의 경우 특별법원인 반부패법원에 직접 기소한다.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정부 각료, 업계 거물, 재판관 및 고위 정치인들을 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SFO),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CPIB) 등을 포함한 해외 단속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부패행위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KPK는 2023년까지 3기에 걸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1기(2011년 - 2015년): 국가청렴시스템의 기반구축
- 2기(2015년 - 2019년): - 국가청렴시스템 정착
  - 입법·행정 및 사법부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 조직의 부패 근절
  - 사기범죄 통제 시스템 시행(Fraud Control System) 시행
- 3기(2019년 - 2023년): 국가 전반에 청렴문화 정착

그러나 KPK가 정치인들이 대거 연루된 뇌물사건을 들춰내면서 국회 일부 인사, 경찰 등 여타 수사기관과의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2007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당시 대통령의 사돈 등 정·재계 거물을 잇달아 체포한 안파사리 아즈하르 전 KPK 위원장이 살인교사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으며, 최근 인도네시아 하원이 KPK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KPK 당국자들이 끊임없이 정치적 보복과 견제를 받고 있다.



## 적용 대상, 내용 및 법적 제재

Soemadipradja & Taher (S&T), Anti-Corruption Regulation 2017 (2017) 발췌·번역

인도네시아는 다음과 같은 반부패 법률과 규제를 보유하고 있다.

- ① 뇌물에 관한 법률 제 11호 (뇌물방지법) (1980)
- ② 부패, 결탁, 정실에서 자유로운 국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8호 (국 거버넌스법) (1999)
- ③ 부패 척결에 관한 법률 제 31호 (반부패법) (1999, 2001년 법률 제 20호로 최종 개정)
- ④ 반부패위원회(KPK)에 관한 법률 제 30호 (2002)
- ⑤ 부패 법원에 관한 법률 제 46호 (2009)
- ⑥ 자금세탁 방지 및 척결에 관한 법률 제 8호 (2010)
- ⑦ 국가 기관, 정부 공직자 및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선물 또는 지급의 수수 또는 요청을 금지하는 기타 규제 및 행동강령
- 기업 범죄에 대한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2016년 대법원 규정 제 13호 (SC 규정) (2016)

### ● 적용 대상 및 내용



#### 1) 국내 공무원

인도네시아 헌법에서는 공무원을 입법 기관, 정부 기관 또는 정부에 의하여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구성된 인민대표기구의 구성원으로 선출된 자 또는 선거의 결과가 아닌 다른 이유로서 구성원이 된 모든 자로 정의한다. 또한 헌법에서는 재판관, 종교회의 의장 및 구성원, 군에 참여하는 모든 자도 공무원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패 척결에 관한 법률 제 31호(반부패법)**에서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국가 또는 지방 재정에서 급여/봉급을 받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 재정에서 지원을 받는 기업(공기업)에서 급여/봉급을 받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 자본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기업에서 급여/봉급을 받는 사람

위와 같이 국가가 소유하거나 국가가 지배하는 기업의 직원은 국가 또는 지방 재정에서 지원을 받거나 국가 또는 공공의 자본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기업에서 급여 또는 봉급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또한 1999년 제정된 **부패, 결탁, 정실에서 자유로운 국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8호(국거버넌스법)**에서는 '국가 기관' 구성원을 정부(행정부),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및 국가 운영과 관련된 임무를 가진 기타의 공직자(대사, 지사, 평의원 등)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공무원 뇌물에 대한 **뇌물에 관한 법률 제 11호(뇌물방지법)**과 **부패 척결에 관한 법률 제 31호(반부패법)**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공무원이 자신의 의무에 반하는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공무원 또는 국가 기관에 어떠한 것을 제공 또는 약속하는 것
- 공무원 또는 공직자에게 그 직위와 관련하여 그 공적 임무와 의무에 반하는 선물을 제공하는 것
-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제공 여부를 막론해 현금, 물품, 할인, 수수료, 무이자대출, 여행상품권, 숙박 시설, 무료 의료 및 기타 시설의 제공
- 공무원, 타인 또는 기업을 위해 이익을 만들어내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 행위로서 국가 재정 또는 경제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
- 공무원 규율 규칙에 관한 정부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누구에게서도 그러한 선물의 제공이 공무원의 직위 또는 임무와 관련이 있음을 알았거나 응당 알았어야 하는 일체의 선물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됨

### 선물 및 접대(사례)의 사전승인



선물 및 접대의 사전승인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법은 국내 공무원과 관련된 제한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부패 척결에 관한 법률 제 31호(반부패법)**은 '사례'의 정의를 현금, 물품, 할인, 수수료, 무이자대출, 여행상품권, 숙박 시설, 무료 의료 및 기타 시설의 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 또는 국가 기관 구성원의 임무, 책임과 관계가 없는 선물은 허용하고 있다. 단, 공무원이 KPK로부터 해당 선물의 수수 또는 보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원에게 제공된 생일 또는 결혼 선물도 반드시 KPK에 보고해야 한다. 반면에 외국 공무원에 대한 선물, 여행 경비, 식사 또는 접대 제공에 대해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급행료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반부패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의무에 반하는 무언가를 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 호의를 대가로 자신의 직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또는 공직자에게 '사례'를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령 발표를 통해 급행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불법적인 비용 지급을 없애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 왔다. 여러 부처와 검찰로 구성된 특별 대책반이 수립되어 사안을 감독하고 각 정부 기관이 자체 특별 대책팀을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공무원에 관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금지조항이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중개인 또는 제3자를 통한 지불



중개인으로부터 외국 공무원에 대한 지불을 구체적으로 금지 또는 범죄화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부패법은 국내 공무원과 관련된 부패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모한 자의 위반만을 인정한다.



## 2) 외국 공무원

인도네시아 내의 반부패 및 뇌물방지 규제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 공무원은 법에서 정의하는 '국가 공직자'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 공무원이 국내 공무원에게 뇌물수수료 뇌물에 관한 법률 제 11호(뇌물방지법) 또는 부패 척결에 관한 법률 제 31호(반부패법)를 위반하여 국가 재정·경제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인도네시아 내에서 기소될 수 있다.



## 3) 민간인 (경영진, 임직원)

부패 척결에 관한 법률 제 31호(반부패법)에서 '경영진'은 정관에 따라 기업의 경영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범죄행위로 이어진 기업정책 또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실제로 권한을 갖고 참여한 이들이 포함된다. 이는 회사의 고위경영진, 이사회 또는 위원회 구성원, 또는 회사의 주주도 의미하나 통상적으로 회사의 고위 관리자와 이사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법인이 형사 기소를 당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인도네시아 형법은 원칙적으로 '개인만이 형사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부패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이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형사 책임을 도입했으나, 법률 집행 기관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기업보다는 관련된 '개인'에게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12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기업 범죄에 대한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2016년 대법원 규정 제 13호', 이른바 SC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법인 범죄의 책임 절차와 해결을 규정하는 SC규정은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SC 규정에서는 '경영진'을 기업을 관리하거나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의 정책 또는 의사결정에 대해 지배력을 갖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광범위한 해석을 채택하고 있다. 본 규정의 도입 이후, 2017년 7월 인도네시아 최대 건설업체인 Nusantara Konstruksi Enjiniring이 발리의 국영 병원 신축을 위한 건설자금 중 1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부패방지위원회(KPK)에 의해 기소되었다.<sup>1</sup> 이는 SC 규정에 따라 법인이 입건된 최초의 사례로, 기업 범죄에 연루된 법인체에 대한 법률 집행 기관의 기소는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은 뇌물방지법 위반 또는 관련 회계를 공개할 의무를 가지지 않으나, 인도네시아 형사소송법은 특정 범죄 사건에서 조사자(법무장관실 또는 KPK)는 근거 서류를 포함한 기업의 재무 기록을 수색,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인도네시아의 뇌물방지법과 반부패법은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 감면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은 뇌물방지법과 반부패법에 따른 조사와 처벌 대상이 된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정부 기관과의 협조 등 감경요인을 일반적인 재량으로 고려할 수 있다.

### 기업 범죄에 대한 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2016년 대법원 규정 제 13호 (SC 규정) (Supreme Court Regulation No. 13 of 2016 on Case Handling Procedures for Corporate Crimes)

인도네시아 법 상 기업들은 임업법, 환경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형사 제재의 적용을 받지만, 형사사건에서 법인이 법정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2016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SC 규정은 유한책임회사, 합작회사 등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기업을 포함하며, 현지기업과 외국기업 모두에 적용된다.

**형사 책임** 형사책임은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루된 집단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어떠한 기업이 모기업, 자회사 또는 기타 관련기업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 개입 시 역할에 따라 해당범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기업 과실 판단 시 고려사항** SC 규정은 기업의 범죄에 대한 과실을 판단할 때 재판관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기업이 범죄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의 여부 또는 범죄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행해졌는지의 여부  
2) 기업이 범죄를 묵인하였는지의 여부  
3)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범죄 방지를 위한 법률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법적 제재** 기업이 연루된 범죄에서 재판관은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SC 규정에 따르면 기업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검찰이 기업의 자산을 압수하여 경매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진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에 대한 구금이 이루어진다.

SC규정은 지금까지 제대로 규율되지 않았던 분야인 기업 범죄 처리를 조망하고 있다. 본 규정은 범죄로 이어지는 부작위도 기소될 수 있어, 기업 차원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내부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범죄에 연루될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Indonesian Supreme Court Regulation, Baker McKenzie (2017-02-16)

<sup>1</sup>Anti-graft Court Finds Construction Firm Guilty of Embezzlement in Landmark Legal Case, Jakarta Globe (2017-11-28)

● 법적 제재

부패가 밝혀지는 경우, 법원은 **부패 척결에 관한 법률 제 31호(반부패법)**에 따라 5천만 루피아에서 10억 루피아 사이의 벌금, 최대 20년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선고될 수 있다. 법인체(회사, 비법인사단, 합작사 등)도 부패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부패가 기업에 의해 또는 기업을 대신하여 행해진 경우 '기업'과 '경영진'에 대해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은 반부패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개인에 상당하는 벌금(5천만 루피아~10억 루피아 사이의 벌금)을 물어야 하나 이 때 벌금은 최고 1/3 증가되어 부과될 수 있다.

- 뇌물공여자 - 개인 및 법인(법인체):  
15년 징역 및 벌금 (개인: 최대 7.5억 루피아 / 기업: 10억 루피아)
- 뇌물수수 공무원:  
최대 무기징역과 최대 10억 루피아의 벌금

다음과 같이 반부패법에 규정된 추가적인 처벌도 존재한다.

- 피고가 소유한 범죄를 저지른 회사를 포함, 유형 또는 무형의 동산 또는 부동산, 그러한 관련 물품을 대체하는 물품의 몰수
- 부패에서 얻은 재산과 동일한 액수를 최대치로 하는 보상의 지불
- 기업의 영구적 또는 최대 1년간의 일시적 폐쇄
- 정부가 피고에게 부여하였거나 부여했을 수 있는 특정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 또는 일체의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효화

인도네시아는 해외 부패 또는 뇌물 행위에 관한 법률을 보유하거나 채택하고 있지 않아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대해서도 개인과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검찰은 뇌물사건을 반부패법에 의거해 처리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KPK는 관련국과 형사 사법공조 조약,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해당 부패범죄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반부패법과 곳거버넌스법

<b>법령 출처</b>	법률 제20/2001호에 의해 개정된 부패 척결에 관한 법률 (반부패법) (Law No. 31 of 1999 on Corruption Eradication)	부패, 공모, 정실에서 자유로운 국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8/1999호 (곳거버넌스법) (Law No. 28 of 1999 on State Management that is Clean and Free from Corruption, Collusion and Nepotism)
위반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재정 또는 국가 경제의 손실</li> <li>2. 다음이 요구되는 뇌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언가를 지급 또는 약속</li> <li>- 직위로 인해 그 의무에 위반이 되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공무원을 설득할 목적을 가진</li> </ul> </li> <li>1. 권력의 남용</li> <li>2. 강요</li> <li>3. 횡령</li> <li>4. 조달에 있어 이해상충</li> <li>5. 함양<sup>1</sup></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모 - 국가 기관과 또는 국가 기관과 여타 당사자 간의 모의/불법적 협력으로서 타자, 사람 및/또는 국가에 손해를 유발하는 것</li> <li>2. 정실 - 그 가족/친척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 및/또는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가 기관에 의한 일체의 불법적 행위</li> </ol>
<b>뇌물</b>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얻었다고 추정되는가?	O (다만 여러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sup>2</sup> )	해당 없음
금행로는 법에 저촉되는가?	O	O
기업 접대는 법에 저촉되는가?	O <sup>3</sup>	해당 없음
최소 허용 기준이 존재하는가?	X (다만 이익이 일정 액수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특정 예외가 적용된다)	해당 없음
금전적인 뇌물만 해당되는가?	X	해당 없음
<b>공무원</b>		
위반 행위는 공무원 뇌물수수에만 적용되는가?	O	O
인도네시아 국외에서 행한 행위		
해외에서 발생한 뇌물수수도 법에 저촉되는가?	O	O
행위가 발생한 외국에서도 행위가 불법이어야 하는가?	X	X

책임	법률 제20/2001호에 의해 개정된 부패 처벌에 관한 법률 (반부패법)	부패, 공모, 정실에서 자유로운 국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8/1999호 (국가버넌스법)
인도네시아 국적자?	0	0
인도네시아 기업?	0	0
인도네시아 합자회사(유한 책임 회사 포함)?	0	0
인도네시아 기업의 임원?	0	0
해외 자회사가 외국에서 뇌물수수를 한 경우 인도네시아 기업인가?	0	0
외국에서 뇌물수수를 한 경우 인도네시아 기업의 해외 자회사인가?	0	0
인도네시아에서 뇌물수수를 한 경우 외국국적자/기업/합자회사인가?	0	0
외국에서 뇌물수수를 한 경우 주소지가 인도네시아거나 인도네시아에 '상주하는' 외국국적자인가?	0	0
외국에서 뇌물수수를 한 경우 외국 기업/합자회사인가?	0	0
<b>처벌</b>		
처벌 내용.	<b>뇌물 공여자</b> (모든 법적 단체, 개인 또는 법인) : 15년 징역과 개인의 경우 최대 750백만 루피아, 기업의 경우 10억 루피아의 벌금 <b>뇌물 수수 공무원</b> 최대 무기징역과 최대 10억 루피아의 벌금	해당 없음
<b>소명사유</b>		
소명사유가 있는가?	0	0

<sup>1</sup> 부패방지위원회(Komisi Pemberantasan Tindak Pidana Korupsi, KPK) 규제 제 2/2014호. 항응보고와 평가에 대한 지침은 항응 보고 의무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sup>2</sup> 예외사항에는 판매가액이 1백만 루피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신물로서 특정 전통/종교 행사와 관련하여 제공된 것,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공된 이익으로서 가치가 1백만 루피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포함된다.

<sup>3</sup> 기업집단이 공무수행 중에 적법하게 획득된 것으로서 공개된 방식으로 제공되고, 금액이 매년 발표되는 일반 비용기준에 관한 외교부 규정에 따라 할라지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인도네시아의 연고자본주의와 부패



인도네시아에서 '반부패 개혁'은 국가 차원에서 오랫동안 이슈화된 사안이다. 크고 작은 부패스캔들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권력구조 안에서 논의되고, 조사되고, 수사되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도네시아 특유의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 정당 간 연립정부 형태가 부정부패의 고리를 단절하지 못하고 부패 혐의자에 대한 단죄를 어렵게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연고자본주의는 사업가가 정치적 후견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인은 사업가에게 각종 이권사업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결탁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정경유착 관행을 일컫는다. 인도네시아의 연고자본주의는 수하르트(Haji Mohammad Soeharto) 정권 시절 막강한 경제권을 갖고 있던 화교들이 원천적으로 정계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자기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력자들과 결탁하면서 관행화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각종 인허가와 민원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확산되어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에도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인도네시아 전자신분증(E-ID) 사업 비리 혐의로 입건된 세트야 노반토(Setya Novanto)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이 KPK 수사관 청문회에 회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기소권 박탈을 시도한 사례이다. 전자신분증(E-ID) 사업 비리는 2011~2012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5조9천억 루피아(약 4천800억원)를 들여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전·현직 하원의원 30여명에 대한 뇌물 등으로 유용된 사건으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이기도 한 노반토 의장은 인도네시아 전자신분증(E-ID) 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여해 5천740억 루피아(약 460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과 경찰의 알력 다툼 끝에 2017년 11월 KPK는 세트야 노반토 하원의장을 구속하였다.

〈이슈스페셜: 아시아의 반부패〉, 포스코경영연구원 (2014),  
'부패혐의' 인니 하원의장, 수사불응 논란끝 결국 구속, 연합뉴스 (2017-11-20)



## 기업 위반 사례

### 우버(Uber)

# UBER

2017년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를 받음에 따라 자체 조사를 통해 아시아 지역 거래 내역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중국, 인도, 한국 등 최소 5개국에서 뇌물 공여가 의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우버는 FCPA 위반 혐의 내부 조사를 맡은 미국 법률회사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O'Melveny & Myers LLP)와 협력하여 아시아 지역 사업부의 자금 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직원들을 불러 잠재적으로 문제 있는 거래들을 추궁하고 있다.

우버 인도네시아 법인 소속 직원은 현지 교통 단속에 걸리자 경찰에게 수차례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뇌물을 지급한 직원의 지출 보고서에 기록돼 있었으며, 당시 인도네시아 법인장이 해당 지출 보고서를 결재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와 우버의 사업 관계도 집중 내사 대상이다. 우버는 2016년 8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설립한 기업가 양성 단지 '글로벌 이니셔티브 창조센터'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우버의 기부가 이뤄진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말레이시아 정부가 우버에 유리한 차량공유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말레이시아 국회의원들과 우버 간 금융 거래 여부 등 유착 관계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우버, 한국 공무원에 뇌물?..미 법무부 거래 내역 조사 중, 중앙일보 (2017-09-20)





## 기업 우수 사례

### 페르타미나(Pertamina)



#### 사건

영국 연료첨가제 공급업체인 이노스펙(Innospec Limited) 전 임원이 400만 달러의 테트라에틸납 정부계약을 따내기 위한 목적으로 PT Soegih Inter Jaya(SI)의 전 임원을 중개인으로 내세워 2003년 19만 달러의 뇌물을 페르타미나(Pertamina)의 전 임원에게 공여하였다.

페르타미나의 임원은 뇌물을 받은 후, 이노스펙과 맺은 테트라에틸납 계약을 연장하고 또 다른 기업인 TDS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로 인해 페르타미나 임원은 테트라에틸납을 구매할 때마다 톤 당 500달러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었다.

#### 결과 및 판결

- 자카르타 부패 법원(Jakarta Corruption Court)는 페르타미나 전 디렉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 이노스펙 영국은 페르타미나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4년 영국 뇌물방지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 받고,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에 1270만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하였다.
- PT SI 디렉터에게 영국뇌물방지법에 따라 3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 이노스펙의 지역 세일즈 디렉터는 영국뇌물방지법에 따라 18개월의 징역을 구형했다.

#### 페르타미나 클린 프로그램

페르타미나는 부패스캔들 이후 자사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으로 2010년부터 '페르타미나 클린 프로그램(Pertamina Clean Program)'이라는 준법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페르타미나 임직원, 밴더, 공급업자, 지방 경찰관, 미디어 등을 포괄한다.

#### 내부고발시스템

페르타미나는 클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절도, 사기, 법규 위반, 뇌물, 이해상충, 재무제표위조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법행위가 의심이 되는 경우 익명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은 전화, 문자, 애플리케이션,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해 고발할 수 있다.

**PERTAMINA CLEAN**  
Indonesian Version

Make a Report

Phone:  
(021) 381 5909  
(021) 381 5910  
(021) 381 5911

SMS and Whatsapp:  
0811 861 5000

Fax:  
(021) 381 5912  
(Download cover sheet here)

Email:  
pertaminaclean@tipoffs.com.sg

Postal:  
Pertamina Clean  
P.O.Box 2008  
10102

(Download cover sheet here)

---

**Deloitte's Whistleblower Service (Tip-offs Anonymous™)**  
Please make your report by entering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below.

Brief Description  
Description

Please select from the category of this report:

1. Would you like to remain anonymous? If yes, please proceed to Questions 5

2. Would you like to disclose your identity to Tip-offs Anonymous? If yes, please provide your name and position in the company

3. Would you like to disclose your identity to Tip-offs Anonymous and Peranmas? (Yes/No)

4. Can we contact you again for additional information? If yes, please provide your contact number or email address

5. What is the incident you wish to report? (Full Description)

6. How did the incident occur? (The process/steps)

7. What is the name and position of the person you wish to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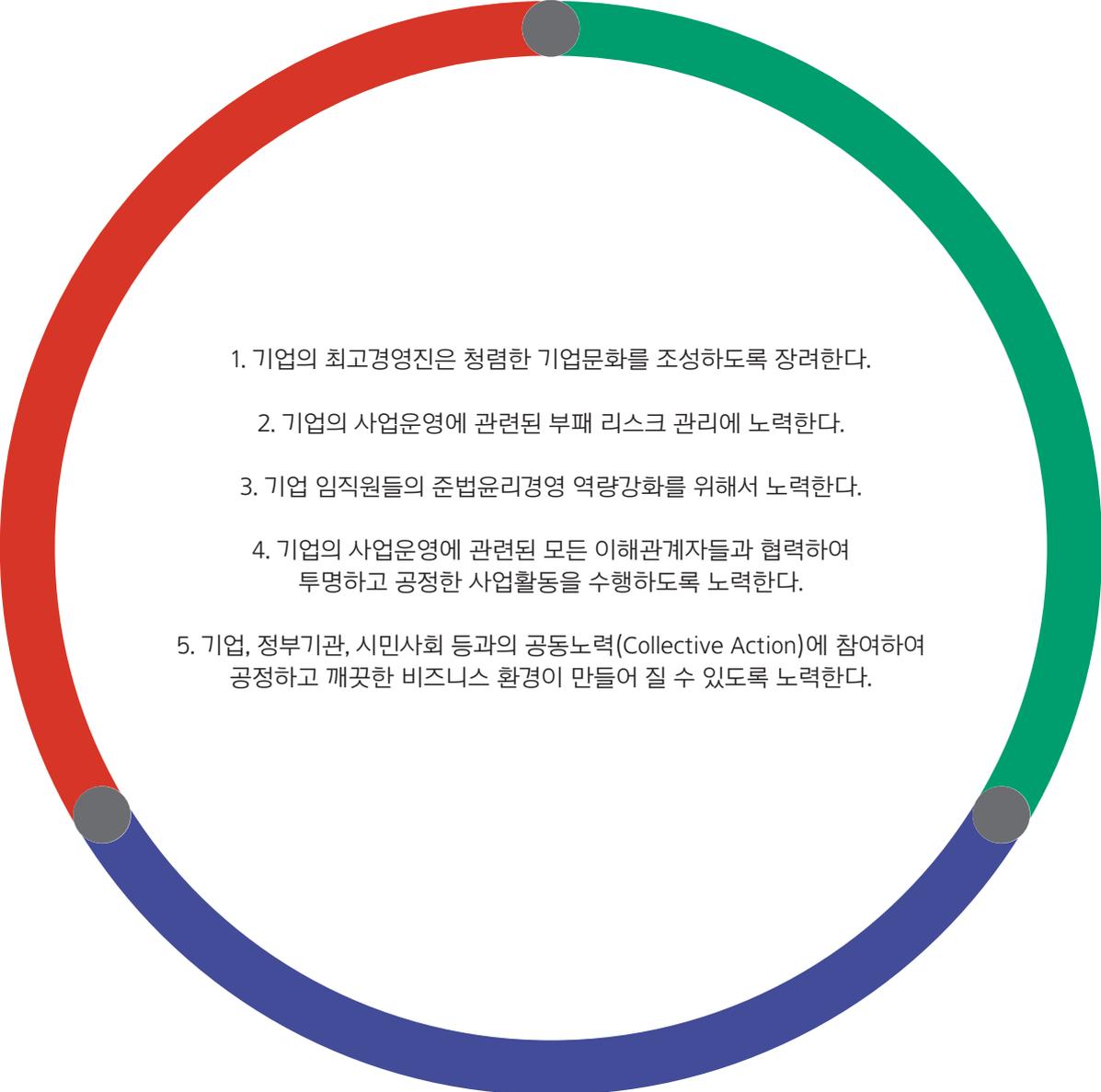
8. Where was the item kept prior to removal? (workplace; transit; client)

Indonesia's Pertamina replaces "problematic people" amid graft probe-oil min, Reuters (2015-11-25), Pertamina 홈페이지

## 참고자료 및 웹사이트 (Reference)

참고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7.10)
2	국민권익위원회	제8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 결과 보고서 (2017.7)
3	국민권익위원회	2010 국민권익백서 (2011)
4	국민권익위원회	동남아시아 부패현황과 반부패정책 (2011)
5	한국형사법학회	반부패 수사기구 해외 입법례 및 평가 (2013)
6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슈스페셜: 아시아의 반부패 (2014)
7	ASEAN Secretariat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8	ADB/OECD	Anti-Corruption Action Plan for Asia and the Pacific (2001)
9	ADB/OECD	Corporate Measures to Prevent and Detect Corruption in Asia and the Pacific (2014)
10	APEC	Summary Record: The 25th meeting of the APEC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2017)
11	Baker McKenzie	Indonesian Supreme Court Regulation on Corporate Crimes Puts Corporations at Greater Risk of Prosecution (2017)
12	Baker McKenzie	Key Changes to Vietnam's Draft Anti-Corruption Law (2016)
13	Clifford Chance	A Guide to Anti-Corruption Legislation in Asia Pacific – 4th Edition (2015)
14	Clifford Chance	Anti-Bribery and Corruption Review (2017)
15	CMS	CMS Guide to Anti-Bribery and Corruption Laws (2017)
16	FTI Consulting	Anti-corruption compliance for Asia (2016)
17	Global Investigations Review	The Asia-Pacific Investigations Review 2017 (2016)
18	Hogan Lovells	Anti-corruption enforcement in the ASEAN region (2016)
19	OECD	Fighting the Crime of Foreign Bribery (2017)
20	Soemadipradja & Taher (S&T)	Anti-Corruption Regulation 2017 (2017)
21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Transparency in Corporate Reporting: Assessing the 30 largest companies in Vietnam (2017)
22	VILAF	Business ethics and anti-corruption laws: Vietnam (2016)
23	연합뉴스	총리비자금 연루 말레이 1MDB, 중동국부펀드에 12억달러 상환 (2017-12-28)
24	Antara News	Former chief executive of Garuda airline grilled by KPK (2018-01-11)
25	The Diplomat	Corruption Is Holding ASEAN Back (2017-01-31)
26	The Financial Times	Rolls-Royce scandal puts Thailand military rulers under spotlight (2017-01-24)
27	The Nation	NACC facing 'uphill task' in Rolls-Royce bribery case probe (2018-01-05)
웹사이트		
1	국민권익위원회	<a href="http://www.acrc.go.kr/">http://www.acrc.go.kr/</a>
2	한-아세안센터	<a href="http://www.aseankorea.org/kor/">http://www.aseankorea.org/kor/</a>
3	ADB/OECD Anti-Corruption Initiative	<a href="https://www.oecd.org/site/adboecdanti-corruptioninitiative/">https://www.oecd.org/site/adboecdanti-corruptioninitiative/</a>
4	ASEAN Secretariat	<a href="http://asean.org/">http://asean.org/</a>
5	Baker McKenzie	<a href="http://www.bakermckenzie.com/">http://www.bakermckenzie.com/</a>
6	Business Anti-Corruption Portal (BACP)	<a href="http://www.business-anti-corruption.com/">http://www.business-anti-corruption.com/</a>
7	Clifford Chance	<a href="https://www.cliffordchance.com/home.html">https://www.cliffordchance.com/home.html</a>
8	CMS	<a href="https://cms.law/">https://cms.law/</a>
9	Getting the Deal Through (GTDT)	<a href="https://gettingthedealthrough.com/">https://gettingthedealthrough.com/</a>
10	Global Legal Insights	<a href="https://www.globallegalinsights.com/">https://www.globallegalinsights.com/</a>
11	Cargill	<a href="https://www.cargill.com/home">https://www.cargill.com/home</a>
12	Vinamilk	<a href="https://www.vinamilk.com.vn/en">https://www.vinamilk.com.vn/en</a>
13	Pertamina	<a href="http://www.pertamina.com/en/HomeM">http://www.pertamina.com/en/HomeM</a>
14	LAW.COM	<a href="https://www.law.com/">https://www.law.com/</a>
15	OECD – Bribery and Corruption	<a href="http://www.oecd.org/corruption/">http://www.oecd.org/corruption/</a>
16	UK Serious Fraud Office (SFO)	<a href="https://www.sfo.gov.uk/our-cases/">https://www.sfo.gov.uk/our-cases/</a>
17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a href="https://www.transparency.org/">https://www.transparency.org/</a>
18	UNODC	<a href="https://www.unodc.org/">https://www.unodc.org/</a>

## 페어플레이 원칙 (Fair Play Rule)

- 
1. 기업의 최고경영진은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도록 장려한다.
  2. 기업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부패 리스크 관리에 노력한다.
  3. 기업 임직원들의 준법윤리경영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4. 기업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5. 기업, 정부기관, 시민사회 등과의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에 참여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비즈니스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Network Korea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 749 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Web.** www.unglobalcompact.kr

| 페어플레이어클럽 사무국

| fpc@globalcompact.kr

| www.fairplayerclub.kr

Fair   
Player  
Club